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

- 자유진영의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

- **일시** 2018년 12월 14일 (금) 오후2~6시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 물망초
바른사회시민회의 ·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 선진통일건국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 자유민주연구학회
트루스포럼 · 한국자유회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프로그램 I]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05	국민의례	
14:05~14:20	【격려사】	박 관 용 (前 국회의장)
		노 재 봉 (前 국무총리)
		김 진 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사회: 김 석 우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14:20~14:35	【발제 1】	자유진영의 이념, 철학 그리고 시대정신: 김 주 성 (前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14:35~14:50	【발제 2】	왜 자유진영인가?: 조 성 환 (한국자유회의)
14:50~15:05	【발제 3】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의 사명과 역할: 현 진 권 (바른사회시민회의)
15:05~15:20	【초청발제】	자유진영에 바란다!: 김 대 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15:20~15:30	Coffee Break	

[프로그램 II]

시 간	내 용	
사회: 김 광 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15:40~15:50	【토론 1】	김 은 구 (트루스포럼)
15:50~16:00	【토론 2】	김 태 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16:00~16:10	【토론 3】	도 태 우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16:10~16:20	【토론 4】	박 선 영 (물망초)
16:20~16:30	【토론 5】	손 용 우 (선진통일건국연합)
16:30~16:40	【토론 6】	유 광 호 (자유민주연구학회)
16:40~16:50	【토론 7】	이 희 범 (자유민주국민연합)
16:50~17:00	【토론 8】	허 광 일 (북한민주화위원회)
17:00~17:30	종합 토론	
17:30~17:40	대한민국 자유진영 시국선언문 발표	
17:40~	폐회	

[목 차]

선 언 문

- 대한민국 자유진영 시국 선언문 ----- 11

격 려 사

- 김 진 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 13

발 제

- 자유진영의 이념, 철학 그리고 시대정신
김 주 성 (前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 19
- 왜 자유진영인가?
조 성 환 (한국자유회의) ----- 25
-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의 사명과 역할
현 진 권 (바른사회시민회의) ----- 29

초 청 발 제

- 자유진영에 바란다
김 대 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 35

토 론

- 김 은 구 (트루스포럼) ----- 45
- 김 태 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 49
- 도 태 우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 52
- 박 선 영 (물망초) ----- 65
- 손 용 우 (선진통일건국연합) ----- 71
- 유 광 호 (자유민주연구학회) ----- 77
- 이 희 범 (자유민주국민연합) ----- 81
- 허 광 일 (북한민주화위원회) ----- 88

〈대한민국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
자유진영의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자유진영 시국선언문

대한민국 자유진영 시국 선언문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래 자유·민주·공화국의 이념과 제도적 기반 위에서 70년 동안 기적과 같은 번영의 현대사를 가꾸어 왔다.

우리 자유진영은 대한민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비롯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여 건설된 국가로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모든 개인의 자유’에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 자유진영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및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실현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과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나아가는 길임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 자유진영은 1948년 제헌 헌법의 헌정 질서를 계승하며,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촛불혁명정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역사의 반동으로 규정한다.

2. 우리 자유진영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빙자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언론·방송매체를 장악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규탄한다.

3. 우리 자유진영은 문재인 정권이 ‘거짓’ 평화와 ‘우리민족끼리’라는 정치선동으로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독재정권과 결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며 한미 동맹 및 모든 외교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반역적 행위를 반대한다.

4. 우리 자유진영은 문재인 정권이 기업을 좌악시 하며 대중영합주의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온 국민을 파탄에 빠뜨린 망국적 행위를 규탄하며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즉각적인 복원을 촉구한다.

5. 우리 자유진영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이 우리 헌법과 헌정질서를 존중할 것과 21세기 자유시민의 시대적 요구에 온전히 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 자유진영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체하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고발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데 있음을 결의한다.

2. 우리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종북·친북단체를 제외한 모든 건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임을 결의한다.

3. 우리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청년세대들이 자유통일과 21세기 세계중심국가의 주역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12월 14일

대한민국 자유진영 시민단체 일동

격 력 사

참회(懺悔) · 정도(正道) · 대안(代案), 대한민국 개혁 주류 세우기

김 진 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前 서울시립대 총장
前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장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1980년 이후 아침 등산할 때마다 경건한 공간을 만날 때마다 특히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내 나뭇잎의 문구로 기도를 올립니다.

“단군님, 하느님, 부처님, 선조님들이시여. 오늘 이 자리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진실에의 외경과 깨달음의 채찍질을 주옵소서. 1592년, 1637년, 1910년, 1945년, 1950년... 국파(國破)와 적전분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구란(救難)의 밑알이 되고, 구국(救國)의 전사가 되고 대한민국이 인류지구촌 새 시대, 새 역사, 새 문명 창조의 주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혼을 불어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사나운 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위 아래 온갖 방향에서 perfect storm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의 경멸과 불안이, 정치와 사법과 국가 제도에 대한 불신과 폭력이, 경제 산업 기업 노동 경쟁력의 속절없는 추락이,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과 대립이, 인구 가족 이웃(마을) 중간조정기구 노사관계의 붕괴와 파열이, 스승 없는 교육, 사목 없는 종교, 인륜이 깨진 사회 공동체 해체 현상이 한꺼번에 몰려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온갖 방향의 perfect storm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근대 진보 500년을 지탱했던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대반동 대분열을 일으키는 perfect storm이, 아시아 태평양 세력판도 재편과 신냉전의 perfect storm이,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인간이 인공생명을 창조하는 신(神)되는 AI, Bio혁명의 perfect storm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 생명자원의 절대부족, 토양 공기 물의 악화라는 초근대문제군의 perfect storm이 한반도와 중국 아시아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가히 전 방위, 다중층, 완전 복합 perfect storm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고통을 밖으로 핑계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해방과 미국과 소련에 의한 분단, 6.25전쟁, 1997년의 외환위기와 일본의 배신, 2016년 이후 중국의 THAAD 협박...우리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청태종, 유안스카이, 이토 히로부미, Theodore Roosevelt(George Kennan, Dean Acheson), 조지프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Richard Nixon, Jimmy Carter 그리고 오늘의 Donald Trump, 시진핑, 아베신조, 김정은 ... 침략과 배신과 분노의 대상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분노할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강의 힘 못키운 우리자신입니다. 건국 이후 제3세계국가들은 물론 일부 선진국조차도 추월한 대한민국의 성취를 갉아먹고 오늘 이렇게도 완벽하게 국파의 위기와 perfect storm을 맞게 된 우리자신에 분노해야 합니다. 비극의 역사 마디마디마다 마치 이 반도의 숙명처럼, 역사의 운명처럼 반복된 우리안의 패거리 대결, 내부분열, 적전분열, 외눈박이 현실안주에 분노해야 합니다. 전방향 다중층 perfect storm을 초래한 역사적 책임에서 대한민국 안의 관·민, 좌·우, 보수·진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안팎의 perfect storm에다 우리안의 내부분열, 적전분열이라는 결정적 tipping point, stall point(비행기가 실족 추락 직전 상태)를 맞았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위기, 지구촌 200개 가까운 나라 중 가장 의미깊은 도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자리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탄허 스님의 말씀을 빌리면 ‘희망의 고통’, 후천개벽을 여는 진통입니다. 대한민국이 맞는 perfect storms은 그 어느 선진국들 보다 후진국들보다 전통과 근대와 초근대가 가장 첨예하고 복합적으로 얽힌 지구촌인류문제군의 perfect storms입니다. 이 perfect storms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은 새 틀, 새 paradigm, 새 역사, 새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간 숙명처럼 여겼던 사대, 조공, 식민, 타율적 전쟁이라는 반도의 분단성 대결성을 극복하고 균형, 가교, 조정이라는 반도의 중심성을 창조하면 그것이 바로 새 틀이고 새 paradigm이고 새 역사 새 운명 창조이고 개척입니다. 해양화 근대화에 특출하게 성공한 대한민국은 이제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해양과 대륙을 모두 흡수 승화하는 반도의 중심성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보의 자강, 정치의 자결, 경제의 자립, 사회공동체의 자치, 시민의 자유, 지구촌 시대 최후의 주권인 과학기술의 자성(自成)을 이루면 우리는 한반도 새 역사의 주인 새 인류 문명사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극단의 압축성공과 극단의 초고속 성장 그리고 극단의 압축 역(逆)성공과 도착적 근대화(perverted modernization) 역발전(counter development)을 냉정히 성찰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공의 유전자는 키우고 역성공의 유전자를 걸러내어 4차 산업혁명과 지구촌사회의 새 질서, 지속가능 새문명 창조의 선구자로 부활해야 합니다.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는 부활직전의 고통, 해방적 파국, 개벽을 맞는 진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 고통을 회피하려는 자, 대한민국의 영광과 성취의 이득은 고스란히 챙기고 이 국파의 위기에서 기득권과 특권의 잔영에 안주하려는 도피자들은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전직이든 현직이든 모두 지성도 인격도 없는 가짜국민 가짜시민입니다.

대한민국이 키워낸 지난 70년의 역량, 그리고 온누리 공간과 국제기구들을 헤집고 빛내고 있는 대한민국 한인(韓人)들의 역량을 자강의 국가목표, 지구촌 인류문제군 해결의 비전으로 집중, 동원할 수 있는 governance와 리더십을 만들면 perfect storm을 이겨내고,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새 지구촌 대안 문명 창조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의 중심성 창조의 주인이 됩니다.

그 새 주역, 새 주류, 새 세력의 선구자로 나서는 여러분!

첫째, 철저한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저 분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문제점, 대한민국에 perfect storms가 오게 된 내외부 원인을 그 누구보다 철저히 인식하고 책임까지 통감하는 미래개척의 진지한 주류로구나’ 라고 믿을 수 있도록 반성과 성찰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나라 고통을, 자기들이 저지르지 않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이 나라의 과오까지 모두 끌어안고 고민하고 참회하는구나’ 하는 진정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치공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正道(正道)를 걸어야 합니다. 단기 이해관계에 얽매어 이합집산하고 남의 실수에 감 떨어지지만 기다리는 사도(邪道)는 버려야 합니다.

국적 없는 한반도지도 깃발에 평화와 통일의 환상을 담고 평양을 수도로 해야 한다는 광기 종북들의 실수에서 반사이익을 바라지 맙시다.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섞어 들어 종당 항일 독립운동과 자유민주공화국의 피땀과 영광이 뻗 자랑스러운 대한민국태극기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도 냉정히 비판해야 합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근대화혁명의 성취를 자랑하는 어제의 태극기이기보다 오늘의 perfect storm을 극복하는 자강의 태극기여야 합니다. 어제 오늘 보다 미래에 더 큰 자유 민주 다원 개방 연대 평등 한민족의 통일과 한반도평화창조, 개혁을 여는 중심, 상징으로서의 태극기, 세계의 태극기로 승격돼야 합니다.

친정부 반정부, 여야 정당 정권의 인기도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맞는 perfect storms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 고통을 감내하고 개혁을 만드는 희망으로 변환, 승화시킬 것인가만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지성으로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자강을 위하여 안과 밖을 막론하고 반(反)헌법, 반국가적 작태에는 현 정권을 포함하여 그 어떤 사이비 보수, 사이비 진보 권력과의 저항과 투쟁도 마다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책임감과 용기로(박정희 대통령의 충복이 간원했듯이), 박근혜전대통령의 참회와 결단을, 특히 저렇게 처절한 자결이 잇다르는 억울하게 희생되는 부하들의 상사로서, 최소한의 책임있는 결단을 요구하는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셋째 책임 있고 견고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 누가 봐도 이 분들의 대안이 현 정권보다, 사이비 보수, 사이비 진보보다 확실히 우월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알차고, 진솔한 경험이 묻어나고, 생각이 깊고, 북한과 아시아와 세계를 감당할 수 있는 보편적 철학과 가치관이 녹아있구나’ 하는 믿음의 것이어야 합니다. ‘안과 밖으로부터 오는 perfect storm을 막을 수 있는 이 나라의 유일한 주류로구나’ 하는 믿음의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 정치사회의 신뢰 연대회복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희망 만들기에서는 누가 봐도 현 정권보다 확실히 우월한 대안 - 명제에서 깊고, 논리에서 정확하고, 전문성에서 명료하고, 실천성에서 믿음직한 대안 제시에 전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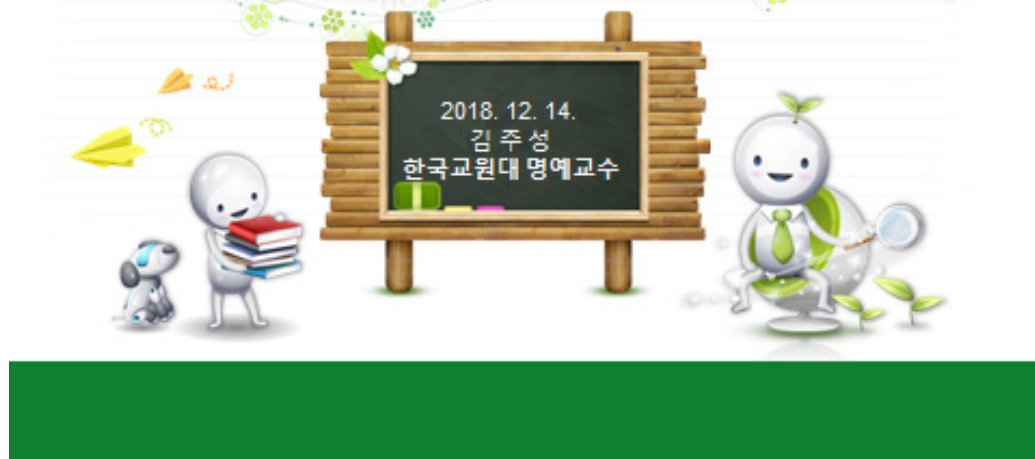
오늘 여러분의 결기가 이 나라의 perfect storms를 막고 자강과 구국, 정의와 평화가 살아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발과 성공을 저 나름의 방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
자유진영의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발 제

- 김 주 성 (前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 조 성 환 (한국자유회의)
- 현 진 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진영의 이념, 철학, 그리고 시대정신



자유진영 승리의 역사1

1. 16, 17, 18C 시장사회와 자유주의

- *개인의 탄생(individual, 1640)
- *사회의 탄생(society, 1630)
- *자유주의 혁명:영국/미국/프랑스
- *나폴레옹전쟁과 빈 체제(1814-15)



2. 19C 혁명의 시대

- *산업 혁명과 부르주아/노동자 급증
- *반봉건 혁명, 사회주의 혁명

- *영국, 선거법 개정투쟁(유권자비율 5.9%에서 95.5%까지 96년 걸려)
- *프랑스, 7월혁명(1830), 7월 왕정(루이 필립)
- 2월혁명(1848), 보통선거(루이 나폴레옹 대통령 선출)
- 제3공화국(1875).

- *자유민주주의로 진화해서 혁명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극복

자유진영 승리의 역사2

3. 20C 전쟁의 시대

제1차 세계대전(1914-18), 전통적 군주제와 전쟁
제2차 세계대전(1939-45), 파시즘/군국주의와 전쟁
세계냉전(1947-90), 공산주의와 냉전(열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역사의 종언(1989년 동구의 멸망, 1990년 소련의 해체)



4. 21C 시장의 시대: 변명과 평화

*자유시장의 세계화: 중국, 베트남, 쿠바의 세계자유시장 복귀
영원한 은둔의 국가인 북한의 마지막 몸부림

*자유주의 평화: 세력균형이론의 잠정적 평화와 달리 공동안보원리를
응용하는 항구적 평화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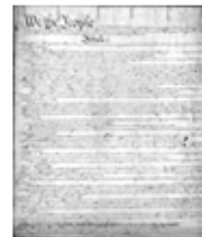
2

자유진영의 정치이념1

1. 근대국가이념(의회정치): 자유주의+ 공화주의

1.1 영국의 입헌군주국(1688 명예혁명),
권리장전과 의회주권
“왕은 통치하지 않는다, 군림할 뿐이다”

1.2 미국의 자유공화국(1787 제헌회의)
권리장전(수정조항)과 공화주의
메디슨: “근대 공화주의 정부에서 집단으로서 인민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다.”



*자유주의 원리: 자연권, 저항권, 제한정부
*공화주의 원리: 혼합정부, 대의정,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계급정치 배제)
*민주주의 원리: 집단으로서 인민의 정치참여(다수의 지배)

3

자유진영의 정치이념2

2 현대국가이념(정당정치): 자유주의+ 공화주의+민주주의

2.1 보통선거의 확립

프랑스(1848), 독일(1871), 영국(1928), 미국(1930)
한국(1948), 스위스(1971)

2.2 정당민주주의(계급정당의 탄생)

사회의 균열선이 의회에 반영
명사의 정치에서 정당관료의 정치로 변화
합의의 정치에서 흥정과 타협의 정치로 변화



*미국은 의회민주주의(비례대표제 없음)
*유럽은 정당민주주의(비례대표제 큼)
*한국은 요즘 계급정치로 발전하고 있음

2.3 현대우파의 견제적 민주주의

“심익민주주의” “포용민주주의” “반응민주주의”

4

자유진영의 정치철학1

1 기본적 자유와 계약의 자유

자유주의 우파: 계약의 자유와 소유의 자유는 기본적 자유
(기본적 자유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됨)
자유주의 좌파: 기본적 자유에 계약의 자유, 소유의 자유 삭제
(기본적 자유의 총량을 위해서 개별자유를 제한가능)



*집권 사회주의: 공공성을 위해서라면 계약의 자유, 소유의 자유를
무제한 제약하려고 함(추미애의 토지공유제 주장과
최근의 노영언론화, 노영기업화, 노영국가화 경향성)

2 기회의 평등과 사회안전망

자유주의 우파: 공정한 기회평등+ 최소존엄성의 사회안전망
자유주의 좌파: 민주적 기회평등+ 최소극대화의 사회안전망

*집권 사회주의: 민주적 결과평등+ 시장잠식의 복지주의

5

자유진영의 정치철학2

3 정부와 시장

자유주의 우파: 작은 정부, 큰 시장(최소한의 시장개입)
자유주의 좌파: 큰 정부, 작은 시장(분배주도의 시장개입)

*집권 사회주의: 최대정부, 최소시장(반시장주의, 전면적 시장통제)
(중국의 사회적 시장주의보다 훨씬 더 반시장적, 반자본적)



6

번영과 평화의 시대정신1

1. 21세기 번영의 시대: 자유시장의 세계화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주의를 증진시킨다는 믿음으로
서양핵심국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구 공산권과
인도/동아시아를 세계시장경제에 편입시킴으로써
유래없는 인류번영을 구가해나가고 있어



현재 북한 빼놓고
중국을 비롯한 모든 공산독재국가 조차도 세계시장에
참여, 유래없는 번영을 구가

7

번영과 평화의 시대정신2

2. 21세기 평화의 시대: 자유진영의 공동방위



과거의 세력균형이론에서는 갈등의 부재라는 잠정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 했지만, 자유주의 평화이론은 '자유무역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믿음과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전쟁에 반대하리라(칸트)'는 믿음이 결합된 안정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려함

이러한 믿음으로 자유우방은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해서 민주적 평화를 정착시켜,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할 수 없는 호전적 독재정권인 북한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상대국이 공동안보를 말할 수 있는 자유민주국가여야(헌법엔 자유민주통일을 지향)

8

감사합니다

좋은 정치로
좋은 사회를
만듭시다

10

왜 자유진영인가?

조 성 환

한국자유회의 / 경기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근대 제국주의, 냉전시기 강대국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존망의 시련을 거쳐 왔다. 19세기 영국과 러시아(독일) 패권경쟁에 휘말려 일본제국주의에 강점되었고,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패권경쟁으로 분단과 전쟁의 참혹한 역사를 겪었다.

그러나 1948년 자유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대한민국은 “피의 골짜기를 지나고 땀과 눈물의 강을 건너 번영의 바다”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의 이념과 제도로 70년 동안 기적 같은 번영의 현대사를 가꾸었다.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현대사의 가장 모범적이고 발전적인 국가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촛불혁명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권의 집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의 나침반은 부서져버렸다. 문 정권의 초법적인 ‘적폐청산’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을 근본부터 해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사법을 정치화함으로써 ‘혁명독재’의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아울러 평화지상주의와 민족공조를 내세우며 전체주의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대륙으로 향하는 파멸의 열차를 몰고 자유국민의 승차를 강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의 선거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정부’를 선언했다. 이것은 “집권의 적법성을 가장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과 체제적 정당성을 파괴하기 위한 주권자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촛불시위’의 선동적 광장정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파면, 대통령 당선, 촛불혁명선언으로 이어진 문재인 정권의 집권과 1년 6개월 통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순한 정치변동이 아니라 70년 자유대한민국을 혁명적으로 파괴하는 체제탄핵에 집중했다.

문재인 정권의 통치는 대한민국의 체제탄핵을 위한 ‘혁명적 칼날’이며, 자유세력에 대한 초법적 숙청이다. 이로써 한국은 지금껏 겪지 못한 ‘공포사회’로 변했다. 문재인 정권은 △ 1948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건국의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탄핵을 결행했고, △ 입법부를 순치시키고 사법부를 정치화시켜 자유·대의·공화의 헌정정치를 심각하게 유린했으며, △ 친사회주의적 국가주의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과 체제를 허물고, △ 환상적 평화주의로 북한 전체주의의 세습독재 정권에 굴종하여 선제적으로 국방체제를 해체했으며, △ 오도된 민족공조 정책으로 ‘한미동맹’의 국제공조를 허물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파괴적 혁명독재’ 정권임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적 통치를 넘어서 초헌법적 ‘혁명의 사령관’으로 여론을 빙자한 폭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집권 후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권은 집권당, 검찰과 경찰, 언론과 정부기

관, 사법부를 ‘혁명의 홍위병’으로 동원하여 법치가 아니라 혁명독재를 일상화시켰다. 야당은 분열되고, 조롱받고 위축되어서 민주주의의 ‘형식적 치장물’로 전락해 버렸고, 문 정권의 혁명독재에 실효적 견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70년 현대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이 “경험해 보지 세계”는 자유와 진실, 문명과 번영의 세계가 아니라 ‘민족’이라는 우상(偶像)에 빠진 독재와 기만, 야만과 파멸의 세계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안으로 파괴적 혁명독재의 야만과 광란에 휩싸였고, 밖으로는 본격화되고 있는 미중패권전쟁으로 인해 국제정치질서 전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시진핑 정권에 들어 가속된 중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팽창과 침략주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응전을 야기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개시했다.

이 전쟁은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의 일대 전환에 의거,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전면적, 공세적 압박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연설,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 메티스 국방장관의 연설은 미국의 세계 및 동북아 국가전략의 일대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 9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의 골자는 ‘주권존중’, ‘공정무역’의 호혜적 적용과 ‘자유·인권’의 보편적 적용이다. ‘주권존중’은 중국의 남사군도 군사기지 건설이 주권적 도발이며, 일대일로 정책은 시대착오적 조공질서화를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중국의 주권 도발은 단순히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을 넘었다. 그것은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 장구한 역사를 통해 세계화되어 안정화된 호혜평등의 주권적 세계체제에 대한 도발이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더 이상 중국의 도발을 좌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트럼프의 공정무역의 강조는 펜스 부통령의 연설로 이어져 중국을 경제침략국으로 규정하게 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은 관세, 쿼터, 기술이전 강요, 지적재산권 절취, 보조금 등 온갖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자유무역과 공정행위를 해치는 경제침략을 자행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자유의 확대와 인권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흘렀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펜스 부통령은 중국 정부의 신장지역 대규모 수용소를 건설을 들어 중국의 반인도 인권침해도 규탄했다.

이와 더불어 메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의 안보의 3대 위협을 러시아는 힘(power), 북한은 긴급성(urgency)으로 규정했고, 중국은 의지(will)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는 중국과는 문명의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북한 핵문제는 긴급하고 단호하게 해결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대북 공세는 더 거세다. 민주당은 북한 비핵화의 궁극적 해결은 인권압박과 전체주의 폭압정권의 제거를 의미하는 ‘레짐 체인지’를 주장하게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 순방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듯이,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CVID) 없는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북한 비핵화 정책,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미국의 중국 및 아시아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은 중국에 대해 닉슨 독트린부터의 포용(embrace)과 협조(cooperation) 대신에 지정학적 포위(encirclement)와 정치적, 체제적 관여(engagement) 정책을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이 정책은 트럼프 독트린으로 불릴 수 있는 대외전략의 일대 전환이다.

트럼프 독트린은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이 ‘현상유지(Status Quo)’가 아니라 ‘현상변경(Status Quo Ante)’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지역적 정책조정과 균형화라는 대응(reaction) 전략이 아니라 강제와 신질서구축이라는 현상변경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트럼프 독트린은 동북아 전략 환경과 한반도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은 호혜·평등의 주권체제, 공정무역, 자유·인권의 문명적 기준을 설정하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시대착오적 도발과 야만적 행동을 제압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효적 수단의 정비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국제정치적 기회를 맞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후견국인 중국을 실효적으로 제압하면서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문제의 해결에 직접 나선 것이다. 트럼프 독트린은 ‘동아시아의 체제자유화’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파괴적 혁명독재로 자유가 질식되는 야만적 퇴행이 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안의 퇴행과 밖의 기회, 즉 야만과 문명의 일대 격전장으로 변한 것이다. 문 정권과 집권 세력은 야만의 채찍을 휘두르고 있고 야당과 자유국민은 혁명적 공포정치에 겁박되어 분열과 좌절의 심연에 빠져 있다.

지금 우리 자유지성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정치적 판의 변화가 빈사의 자유대한민국에게 문명적 행운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이 수호되고 재도약하는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가를 자문할 때이다. 야만의 폭거에 직면한 이 시대의 자유·애국지성은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 아니라 사력을 다해 자유의 희망을 되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광란에 영합해서도, 공포에 질려서도 안 된다. 엄혹한 위기의 현실을 직시하는 차가운 이성으로 어둠을 떨치는 빛의 소재를 찾아 나서고, 시련을 넘어 자유가 부활하는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

안팎에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이미 한국의 자유·민주 지성과 시민세력은 문 정권의 기만적 혁명 독재와 자유대한민국 해체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고발과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떨어진 지지도, 경제와 민생의 파탄, 위장 평화쇼와 일반적 무장해제, (김정은) 대외외교의 굴욕과 참사 등 문재인 독재의 기만성과 파괴성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의 각성, 자유·민주진영의 결집과 반문재인 정권 투쟁이 점증하고 있다.

미국이 당긴 대중 패권전쟁은 호혜주권·공정무역·자유·인권이라는 문명의 힘으로 천하지배·경제침략의 중국적 야만을 제압하는 동시에 전체주의적 사교(邪教)체제, 핵 국가 북한을 구축(驅逐)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당긴 ‘동아시아 자유화’의 순풍은 한국 자유진영의 반(反)독재, 반(反)전체주의적 각성과 결집을 가속시킬 것이다.

비록 우리 자유와 번영의 땅이 ‘거짓과 폭정’에 신음하고 있지만, 한국의 자유지성은 “내 영

흔보다 조국을 더 사랑하는” ‘애국의 덕성’으로 재무장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국의 자유·민주 지식인 단체는 자유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파괴적 혁명독재 세력의 ‘역사적 반동’에 맞설 것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거짓과 속박, 몽매의 터널’에서 구해낼 ‘자유의 전사’가 될 것이다. 우리는 기필코 안과 밖의 ‘자유화’ 물결을 타고 자유대한민국을 문명과 번영으로 이끌 것이며, 노예상태의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자유통일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의 사명과 역할

현 진 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 배 경

- 대한민국은 붕괴되고 있는 실정임.

○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부정되고 있고, 국민 안보체계가 붕괴되고 있고, 권력 균형을 위한 사법권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정치권에 종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대한민국 국회는 붕괴되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막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음.

○ 집권당은 민주를 이념으로 내세우나,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자유이념을 침해하는데 문재인 정부와 공동협업하고 있는 실정임.

○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유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자유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도 없는, 자신의 재선과 당내 세력 확보에만 관심 가지는 이해집단일 뿐임.

○ 즉 집권당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붕괴하는 가치를 가진 이념정당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가치가 없는 무이념 집단이므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수호하는데 국회역할을 기대할 수 없음.

- 민주주의 삼권구조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볼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태임.

○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반대한민국 세력의 정체성 왜곡, 제도 왜곡 등을 비판하고, 국민들에 위기상황을 알릴 수 있는 세력은 '자유 시민사회 조직' 뿐임.

□ 역 할

1. 문재인 정부의 반대한민국 정책에 대한 비판

- 시장경제 체제를 갖춘 정부의 기능을 크게 나누면, ‘보호(protection)’와 ‘생산(production)’임.

o 국민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국방정책, 외교정책 등에 대한 비판

o 시장기능 대신에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과다한 복지생산은 결국은 민간경제 발전을 억제하고, 과잉복지에 따른 부담을 다음 세대에 전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됨.

-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재분배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정책에서 성장과 효율성 제고에 대한 고려없이 재분배 기능에 치중함에 따라 각 분야에 발생하는 붕괴현상은 심각한 수준임.

2. 자유교육

- 대한민국의 가치는 ‘자유’이지만,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음. 자유가치 중에서 경제자유에 대한 인식은 절망적인 수준임. 이에 따라 반시장 및 반기업적 정서가 팽배하여, 시장경제 기반이 무너질 정도임.

- 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야 함.

o 자유가치는 ‘개인가치’, ‘시장경제 가치: 경쟁, 사익, 격차, 자생적 질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의미’, ‘우남 이승만의 건국철학’,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 철학’ 등에 대한 세부적 접근이 필요함.

o 자유가치를 전달하는 방식도 세미나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전달수단을 활용할 필요있음; 영화, 만화, 유튜브 동영상, 소규모 포럼 모임 등.

3. ‘강한’ 자유 시민단체 활동과 ‘느슨한’ 네트워크 구축

- 자유가치를 지키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매우 위축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수준에 반비례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임. 지금까지 자유시민단체는 재정

의존형 구조를 가졌지만, 이제는 이 모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재정독립형으로 자유 시민사회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마음 자세가 필요함.

○ 자유가치를 수행하는 분야는 다양하므로, 개별 단체는 강하게 시민활동을 펼 필요가 있지만, 자유가치에 동조하는 단체들 간에는 강하지는 않지만, 느슨한 연대조직을 구축해 두는 게, 급변하는 대한민국의 붕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될 것임.

〈대한민국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
자유진영의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초청발제

■ 김 대 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헌 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김 대 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1. 보수우파 vs 진보좌파 프레임 보다 자유진영 vs OO진영 프레임이 좀 더 나은 것은 분명함. 저들은 OO에 ‘민주’ ‘평등’ ‘진보’ ‘복지’ 등을 넣었으면 하고, 자유진영에서는 OO에 전체주의, 국가주의, 평등주의 등을 넣었으면 할 것임.

2. 자유, 보수, 우파 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18~20세기 유럽과 미국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민주주의 사상가나 정치가들의 삶과 사상(언명)을 언급하면서 이념(철학, 가치)의 재무장을 촉구함.

- 하지만 저들은 자유진영이 휘두르고 싶어 하는 이념에 (자신들이 신봉하는) 이념으로 맞서지 않고, 적폐라는 이름으로 도덕성(부정비리) 시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름. 즉 이념에 이념으로 맞서지 않고, 도덕으로 맞섬.

- 저들은 노론-친일부역-쿠테타(5.16, 5.18)-반공-반민주-냉전.반통일(분단대결체제 유지)-보수-기득권-재벌-친자유주의 등을 열기설기 엮음.

		가
.	가	가
	.(	, 2018.12.10)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bar/873627.html		

- 먼 과거는 대중적 역사서를 쓴 작가가 파헤치고, 이명박근혜 9년은 검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위, 방통위, 공영방송, 국정원, 기무사를 동원하거나, 과거에 작성된 대외비 문건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파헤치고 있음. 기무사 쿠데타 모의→태산명동서일필!!

3. 정치이념 시비보다 팩트(fact)에 입각한 날카롭고 묵직한 폭로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실물 경제를 아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경제경영학자의 통탄과 통찰을 전진 배치해야 함. 현재 널리 공감을 얻고 있는 폭로는 주로 경제고용 정책이나 현실에 입각한 폭로임.

4. 문재인정부의 패악질은 팩트와 해석을 나눠서, 그 나팔수와 열성 지지자조차도 부인, 변명하지 못하는 명명백백한 패악질과 관점 . 이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패악질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실정 백서 작업이 필요함. 대개 정권이 끝나고 나서 만드는 것이 백서인데, 문정부는 보편이성 . 지성 .양심 혹은 민주주의 공화주의 시장경제의 기본과 원칙을 거스르는 일을 너무 많이 자행해 왔기에, 지금이라도 만들 필요가 있음. 이는 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소장으로, 자유진영의 공공재가 될 수 있음. One source Multi user!!

5. 사물을 분절적, 일면적으로 보고, 도덕(공정)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실물, 시장, 경제, 기업에 무지한) 교수들과 1980년대 운동권 화석 . 좀비들이 권력 엘리트의 중핵을 형성. 하지만 현실적 정합성과 논리적 체계성을 갖춘 이념은 없음.

주사파, 공산주의자, 좌파라기 보다는 조선의 역사문화적 전통의 부활로 보아야 함(위정척사파 선비들과 유사) 조선의 잔혹사, 실패사, 망국사가 아니라 무장독립운동사와 친일청산실패사만 주목한 후과.

<문정부와 민주당, 정의당을 관통하는 이념>

1) 현실의 복잡미묘함을 모르는 단순무식한 도덕주의

-세상을 善惡(선악), 正邪(정사), 正-非, 公-私, 정의-불의, 개혁-적폐, 안전-탐욕/이윤, 우리민족-미일외세 등으로 재단. 세월호 참사, 구의역 김군의 사고사, ktx탈선도, 비정규직도, 원전도 자본, 재벌, 대기업, 원전 마피아 등 소수 음험한 세력의 탐욕 탓으로 봄. 공공부문과 정규직 규모 확대, 규제와 국가형벌권 강화로 귀결.

-세상의 모순부조리가 (자신은 빠진) 소수의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놈들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단순무식한 철부지(문정부의 핵심 지지층)들의 신념과 분노에 열심히 기름을 붓고 있음.

2) 권력만능주의(자율책임으로 도피), 성군주의, 국가주의

-청와대 청원게시판. 시장과 기업을 온통 탐욕, 갑질의 화신으로 봄. 문정부 국정운영계획;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 자체가 권력의 전횡, 권력 오남용이 너무 용이함. 온 사회가 권력의 노예화 될 수 있는 구조. 하위 법령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공개, 견제, 균형 장치를 만들지 않음.

3) 지대추구(공짜 밝힘, 보편이익 무시=특수이익 추구)

-국민눈높이 운운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국민눈높이가 너무 높음.

16.	()
○	81
○	:
-	(: ,)

4) 상무정신 취약-나쁜 母性(모성) 과잉

-자유와 자주(주권)를 위한 무력 행사 개념 부재. 우는 아이 젖주고 어르고 달래는 방식. 자신의 선의와 상대의 호의에 의존하는 평화

-현대판 상무정신은 시장에서의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과 창조적 파괴와 결합. 구조조정, 불평 등 양극화에 대한 두려움.

5) 안보, 안전 불감증=설마주의

-상대의 배신이나 악의에 대한 대책이 없음.

6) 자유정신의 부재

자유 → 계약/거래(비용 대비 편익 따짐) → 보충성 원칙에 의한 위임

*자유인의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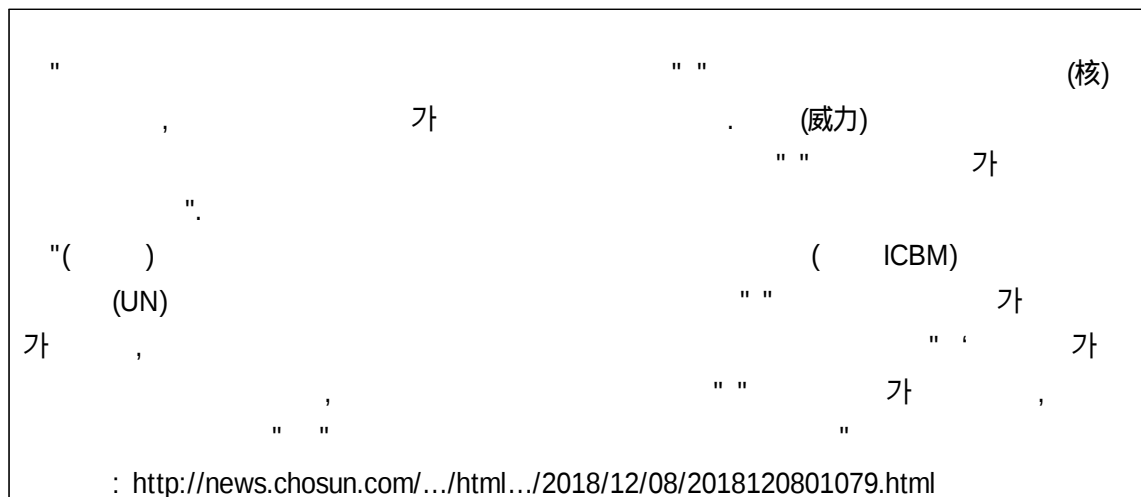
도리 → 당위(비용 대비 편익 무시) → 성왕, 성현, 위인, 수령, 국가, 공공의 통치 → 국가주의, 도덕주의, 전체주의

*피사육인(노예나 가축)의 사상

7) 문명 개념의 부재

- 자유·평등·민주·공화·인권 같은 문명적 가치보다는 혈연적·민족적 가치를 더 중시. 따라서 문명을 공유하는 일본의 오래된 허물은 들춰 적대시. 반면에 피와 말을 공유하지만, 자유, 평등, 민주, 인권 등 문명적 가치라곤 하나도 없는 북한에 우호적임. 북한이 내세우는 자주 가치에 머리를 조아림.

- 북한의 피폐 이유와 대한민국의 발전 이유 무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 이승만 박정희를 강조하다가 대한민국의 본질인 문명(자유, 민주, 공화, 인권, 개방 등)을 놓침.
- 통일에 대한 집단적 동상이몽=정신착란



6. 문정부 출범 이후 1년 7개월 동안 상상을 초월한 무수한 패악질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5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함. 여론 조사 불신은 금물. 문재인을 지지하는 상당수 국민들의 생각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

<문정부의 견고함과 파괴력>

1) 촛불을 들었거나 그에 동조한 촛불 대중(중상층) 중에서 중간(중위)수준의 안목을 견지하고, 또 이들의 물질적 문화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

- 최저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 제로화 등은 공공부문, 조직노동, 대기업 화이트칼라의 기득권(노동지대 등)은 건드리지 않거나 오히려 강화하고, 기업 전반과 취약근로계층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재앙적 타격을 입힘.

- 보편 이성 . 지성에서 먼 미개한 대중의 생각과 정서에 호소

*민족뽕, 통일뽕(7.4, 6.15)=통일대박뽕, 전쟁공포, 설마주의(안전불감증), 경제가 자유롭고 개방적이면(장마당이 커지면) 정치체제가 민주화 된다는 착각. 북한과 남한(성과, 조건)에 대한 무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피흘릴 의지 박약.

2) 총선이나 대선 시기에 문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지원(전쟁이냐 평화냐? → 2010년 지방선거) 반복적(反北的)인 후보나 정권이 들어서려 하면 전쟁 위협으로 남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음.

7. 현시국을 초래한 핵심 원인은 대한민국의 사상(정신문화)적 인프라의 후진성, 권력의 전횡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의 미비, 범 야권(자유 공화, 보수 중도)의 정치적 무능(투쟁과 비전 부재)임.

- 국가권력(대통령과 행정부 권력)의 전횡(갑질)이 가능한 구조 → 국가/관료/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백지 위임(외교안보, 예산, 공무원 인력, 인사(승진, 보직), 감사, 공기업과 공공기관, 각종 합의제 기구 등)

- 무지몽매한 자가 선출되어 (국가와 당에 대한) 전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시스템, 가케무샤와 청와대정부가 가능,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이 됨. 적과 내통도 권력 유지를 위해 서슴없이 할 수 있음.

8. 향후 대립 투쟁 구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보수우파(+중도) vs 진보좌파

자유(+공화) 진영 vs 민주(+진보)진영, 전체주의/국가주의/평등주의 진영

개혁 vs 수구(지대추구 집단)

대한민국 vs 조선(북조선과 남조선)

문명(+보편 이성, 지성, 양심) vs 야만(+미개)

김대중 노무현 vs 김대중 노무현 참칭

화석 좀비 진보/x86 vs 성찰 진화 발전한 진보/x86

경제자살 고용학살 외교자폐 국방자폭 역사자학 신뢰자살을 자행하는 무지몽매한 정권

<참고: 백서에 들어갈 주요 내용>

● 안보외교북한

1) 비핵화와 평화 미궁: 핵리스트 제출 여부, 일정 오리무중, 김정은의 발언과 용도 다한 실험 시설 폐쇄, 핵 양산 및 실전배치 여부 미궁 → 북한과 합세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서방국의 선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모양새. 남한 패싱 필연.

2) 안보 원칙 무시: 김정은의 선의에 매달림. 만약에 대한 대비 전무(대북 경계 약화, 군사 방어벽 파괴)

3) 북한 인권 함구, 북핵에 대한 CVID 원칙 흐릿. 4.27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핵위협 병기, 북 입장 두둔(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칭호). 북한 인권법 통과 됐으나, 북한인권재단 설립 예산 100억원 불용처리. 올해 8억만원 반영 등 실질적 후속 조치 방기.

4) 한미관계 불협화음 및 불신: 사드배치 지연, 종전선언 종용, 유엔사해체, 전작권, 평화협정, 남북 군사합의, 대북제재 허점 찌르기, 유럽순방외교...강경화의 폼페이오의 항의 시인

5) 한일관계 최악: 위안부 합의 비난은 하되 파기는 안함. 징용자 배상 판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무효화 → 일본의 다양한 형태의 보복 초래 *대중국 태도와 비교

6)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는 행동 지속: 쌀 지원(동남아 국가?), 개성공단 통한 전력 지원, 공군수송기 등을 활용한 북한에 대한 물자지원, 하나은행 수뇌부의 체육교류 명목 방북(8월). 남북관계관련 예산 불투명, 비공개, 대담한 전용. *미국 재무부의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확인

7) 얼굴 마담 외교장관(외교안보의 기본 상식이 결여), 북미라인(직업외교관) 배제/좌천(한미 대화 채널 붕괴)

● 경제고용(시장, 산업, 기업, 실물)

주요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한 최저임금 대폭 상향(3년내 1만원), 공공부문 고용 대폭 확대, 비정규직개념 확대와 비정규직 제로화(공공부문 주도, 민간부문 규제 강화 파riba게뜨 5378명 직고용 명령 등), 노동시간 단축(52시간)과 탄력성 협조하게 해석, 공공부문 노조정책 폐기(2대 지침 등), 보조금 1천만원 제공 청년일자리 대책(2018.3.1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원 특별법(2018.12.13 시행) 협력이익공유제 발상, 부동산대출규제(8.2조치+알파), 도시재생 뉴딜(50조), 가상화폐 규제, 법인세 인상, 금리 동결, 의료(문재인케어), 에너지(탈원전 등), 국민연금(인사, 김연명식 보험료/보장성) 정책 등. 주요기업 세무조사 삼성(이재용),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탄압 단죄, 대한항공 집중 탄압. 한진 등 기업(오너)에 대한 태도

- 1) 거의 모든 경제지표 하락. 내수 자영업 부문은 최악의 불경기(직장인 대상 장사, 갑자기 사람 증발 했다고 아우성)
- 2) 취업자 증가량과 질(증가 주도 부문) 악화, 가구소득 양극화 심화
- 3) 국내 투자와 고용, 국내 창업과 취업 요건 악화(최저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 공공부문, 법인세, 노조 정책, 공정거래정책 등)
- 4) 불황기 큰 초과 세수 GDP대비 정부 수입 폭증 및 중앙, 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대폭 증원 → 중부담 저복지의 가렴주구 국가(정부수입 35%-복지지출 10%) 심화.
- 5) 원전산업 고사(중국 등 세계적 추세와 완전히 역행), 태양광 게이트(절차, 오염, 효율), 가스/석탄발전소 가동률 제고, 미세먼지 증가, 전력요금 인상은 필연.
- 6) 민노총 및 공공노조와 연대 *공공기관 고용세습

● 모순.위선.표리부동(일관성), 내로남불, 비열, 유체이탈 화법

- 1) 미국에 대한 북의 공포는 공감(핵리스트=미국의 타격 목표), 북핵/미사일/전체주의/조국통일론과 문정부에 대한 남한의 공포에는 둔감
- 2) 22조 4대강 사업/예산 감사 4번(4번째는 문재인 직접 지시)+검찰수사 vs 50조가 넘는 일자리 예산 감사(?)
- 3) 원전 폐기엔 공론화 도입. 그러나 새만금 태양광 대단지화엔 공론화 생략
- 4) 박정권의 민간기업 경영개입(KD코퍼레이션 등) 권한남용으로 단죄, 하지만 공기업 경영 개입극심: 비정규직 제로화, 협력업체 인력 빼오기, 원전 건설 중단, 단기 알바 일자리 늘리기 등
- 5) 4.27 판문점 선언엔 국회 비준을 요구 9월 평양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준
- 6) 불투명한 남북협력기금 사용(감사 거부) vs 전정권에 대해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파헤쳐서 구속
- 7) 폭탄 미래로 돌리기-국민연금, 공공부문(늘리기, 정규직화 등), 의료 등.
- 8) 끊임없는 이명박근혜 정권 탓
- 9) 중요한 회담장, 회견장에서 A4 읽기 → 지적 능력 의심 → 유체이탈 화법 → 읽는 문서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느낌.

● 자유, 민주, 공화, 공정

- 1) 공영방송의 권영방송화 내지 노영방송화
- 2) 언론자유 후퇴(가짜뉴스 소동, 유튜브 제재, 탈북민 출신 기자 남북 고위급회담 취재 불허 등)

3) 경찰 등 공권력 무력화, 국정원 등 공안기관 무력화, 국보법 무력화 → 대 노조, 대북, 대 방첩(공작조) *태영호 체포조, 백두청송위원회 등. *민노총 시위/파업 진압 포기/방관(백남기 경 관 기소 및 경관 개인 배상 판결, 쌍용차 진압 경찰 기소 등)

4) 입시정책(공론화위원회) 난항

5) 심재철 청와대 직원 카드 사용내역 폭로-검찰 압수수색

● 엽기 발언

2018.9 평양 능라도 경기장 연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2018.9.1 청와대 당·정·청 전원회의 발언: "경제발전의 놀라운 성취 뒤로 특권과 반칙이 난무 하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가 됐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 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
자유진영의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토 론

- 김 은 구 (트루스포럼)
- 김 태 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 도 태 우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 박 선 영 (물망초)
- 손 용 우 (선진통일건국연합)
- 유 광 호 (자유민주연구학회)
- 이 희 범 (자유민주국민연합)
- 허 광 일 (북한민주화위원회)

트루스포럼과 기독교 보수주의

김 은 구
트루스포럼 대표

트루스포럼은 탄핵사태를 지나오며 거짓된 선동정치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시대적 위기감에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포럼입니다. 현재는 트루스얼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각 대학에 트루스포럼을 조직하고 동문 및 일반인을 포함한 전국 조직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도 있었지만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모임의 성격과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반은 외적인 성장보다는 트루스포럼이 추구해야 할 기본가치를 정리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래 다섯 가지를 핵심 가치로 규정했습니다.

트루스포럼의 핵심 가치

트루스포럼은 1.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선대가 이룩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2.북한의 해방이 우리 민족의 사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3.자유와 진리의 가치 아래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4.탄핵사태의 부당성에 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기독교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에 기반하여 운영하는 점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회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4,5번에 관해서는 모임의 확장성을 위해 삭제할 것을 권유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확장성 보다는 기본가치에 집중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특히 5번에 관해서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쿠퍼신학 등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와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 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루스포럼이 나아갈 길 : 기독교 보수주의

트루스포럼은 미국의 펜스부통령 같은 Christian Conservative Leader를 만드는 조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개인의 정치성향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수’라는 말에 ‘과거의 것을 고수하는 고리타분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담겨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철학으로서 보수주의는 이와 구별해서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계몽주의는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의 진보와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혁명은 이러한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진행된 급진적인 혁명입니다. 유럽의 지성인들은 왕정을 무너뜨린 최초의 혁명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혁명이 파괴적이고 비이성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제기됐고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주의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수주의의 반대는 진보가 아닌 급진주의, 혁명주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혁명주의 사상은 인간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성에 기반을 둔 유토피아 달성이 가능하고 믿습니다. 자신들의 이론 체계를 신앙처럼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혁명 즉, 유토피아 달성을 위한 모든 것을 정당화합니다. 거짓말까지도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보수주의는 인간 이성이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선대의 경험을 존중하고, 어떤 가설이 아닌 결과를 중시합니다. 인간이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철학적 근간입니다. 보수주의자라는 말이 정 마음에 안든다면 ‘인간의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신중론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주의의 철학적 배경을 고려할 때 보수주의를 단순히 ‘점진적 개혁’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오히려 본질이 왜곡되는 면이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도 종교개혁을 평가하면서 때로는 혁명적인 방법으로만 제거할 수 있는 악과 폐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주의자가 혁명을 지지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는 보수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이고 보수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는 유대-기독교적 세계관과 불가분의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천국과 지옥까지도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인간의 자유, 그리고 거짓을 떠난 온전한 진실과 진리. 이러한 가치가 바로 성경을 바탕으로 한 보수주의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보수주의자인 버크가 종교개혁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부패한 카톨릭 교회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왜곡되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질적 가치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보수주의자의 혁명가적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부인권에 바탕을 두고 이에 충실하게 진행된 미국의 독립혁명은 보수주의 혁명의 좋은 사례이며 급진좌파인 자코뱅을 중심으로 진행된 프랑스혁명과는 구별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제헌의회 속기록을 보면 기독교인인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박정희 대통령을 ‘보수주의의 적’이라고 지칭하면서 에드먼드 버크라면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혁명세력을 보수주의자로 보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폭력에 의해 전복한 반도이고, 그에 대항하는 세력은 기존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세력’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5.16당시 불안했던 국내외상황을 대한민국의 본질적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본다면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면 된다.’는 자조정신을 강조하고 실적과 결과를 중시하며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한 점에서는 보수주의자와 유사한 면도 보입니다.

자유주의, 세속적 보수주의

트럼프 행정부 안에 펜스부통령과 스티브베넌이 함께 했듯이 트루스포럼 안에는 기독교 보수주의자와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주의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수주의는 자유를 본질적 가치로 이해하면서도 자유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폐해를 경계한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면이 있습니다. 회원들의 성향을 보면 자유주의자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남녀관계, 술 문제, 자기표현에 있어서 보다 개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보수주의 철학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정리된 것이지만 무신론자도 보수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인간의 존엄, 자유, 진실을 본질적 가치로 인식한다면 보수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나라

탄핵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급진적인 혼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생업에 충실하며 조용히 살고 있던 일반 국민들이 이 시간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 상태를 직시하고 자각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사회에 대해 깊이 고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혁명적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라는 거짓된 사상과 싸워 이겨 세워진 나라입니다. 반공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된 후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 정체성의 전쟁을 망각하기 시작했습

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을 말하면서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망했지만 사회주의教徒들은 소련의 실패를 부패한 노동자 집단의 실패, 스탈린 일국사회주의의 패착으로 돌리고 트로츠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신좌파, PC주의, 민중신학, 해방신학, 민주사회주의, 사민주의 등 사회주의의 다양한 변종들을 이용해 여전히 세계를 공격해 왔습니다. 관용적인 민주주의를 이용해 북한을 떠받드는 주사파 정권이 탄생한 한국의 기형적인 사례는 사회주의 혁명가들의 실체와 위험성을 세계 속에 다시 한 번 알리는 경종이 될 것입니다.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장은 사회주의의 폐단과 공격을 극복하고 이뤄낸 유산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은 이 세계사적 전쟁에서 사회주의의 망령과 싸워 이겨 세계 속의 본이 될 운명일 것입니다.

건국정신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김 태 훈

한변 · 성통만사 대표 / 변호사

1.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자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해

70년 전 대한국민은 “한 번 망쳐 민국수립, 두 번 망쳐 실지회복!”이란 국호 아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 당시 유엔은 2차 대전의 참화를 겪은 후 인권 탄압 국가는 호전적이며 전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인 세계인권선언을 만들어냈다.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인권은 자유와 정의, 평화의 기반이 됨을 세계인권선언은 엄숙히 밝히고 있다. 유엔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993. 6. 25.)은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연관성을 강조하고, 인권증진과 보호는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임을 밝혔다.

2. 북한인권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정권이 저지른 반인도범죄를 규탄하고 단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요구이자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상 기본권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과 실현에 관한 사안이다.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2,500만 북한주민이 인권지옥에서 시달리고 있는데도 좌파정권은 물론, 자유진영도 무관심하다. 자유진영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항상 국정과제에서 후순위로 밀려 왔다.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반한 이러한 북한인권의 경시가 오늘의 안보위기, 경제위기, 정치위기를 불러왔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11년이나 걸렸고, 그 제정 이후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구성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유진영의 무관심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또한 국내외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에서 북한 인권에 관해 아무런 거론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국제사회의 조롱도 아랑곳 않고 지난달 12일 공공연하게 북한인권은 압박한다고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국민을 거짓 평화에 취하게 하고 김정은 서울 답방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는 백두청송위원회, 서울시민환영단 등이 공공연하게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다. 반인도범인 김정은이 서울에 오려면 우선 북한 정치범수용소 폐쇄와 정치범들의 즉각 석방부터 약속해야 할 것이다.

결국 최종적인 북한인권 개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있음을 명심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인권유린 적폐수사의 즉각 종단을

현재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적폐 수사가 표적 수사, 과잉 수사, 별건 수사의 행태로 2년 가까이 자행되고 있다. 적폐청산은 주요 국가기관에 법률적 근거 없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반대진영인 과거 정권 관계자들의 비리나 해묵은 의혹을 들춰내고 특정언론에서 보도한 후 시민단체 등 관계자가 고발하고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여 포토라인에 세워 공개적 망신을 시키는 방법으로 여론 재판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하명(下命) 수사를 계속하는 한 이러한 적법절차를 어긴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 7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에서 보았듯이 적법절차를 어긴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치파괴와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모 변호사와 11월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에 이어 이 전 사령관이 세 번째다. 더 이상 이러한 인권침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4. 자유시장경제 파괴와 재산권 등 침해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 자치의 기본을 유지해야 하고, 법치국가적 원리에 따라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던 바가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내세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정책은 반시장적·반기업적이고 반자유적인 정책이고,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중시하는 좌파적인 경제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현을 위한다는 최저임금제 급속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강행,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은 오히려 일자리를 없어지게 하고 저소득층을 더욱 빈곤하게 하는 등 소득 분배를 악화시켰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로 대기업 총수들에게 평양의 남북정상회담에 동행·참석하게 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인한 기업 규제의 가능성이 있는 남북경협에 참여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되었던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의 사적 자치 영

역에 간섭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국내외 경제 침체와 아울러 끝없이 이어지는 대기업의 갑질 폭로 및 친노조적인 정책에 의한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의 바탕이 되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은 지금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제경제의 호황에도 우리나라의 '생산, 투자,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는 하락세이고, '퍼펙트스톰'이라고 불리는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시장경제질서와 헌법 제15조 기업경영의 자유, 제23조 제1항 국민의 재산권 보장, 제34조 생존권,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 및 경제의 규제·조정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 제69조 취임선서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5. 법치파괴적인 민노총의 인권유린

지난 11월 22일 오후 3시 40분쯤 유성기업 본관의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노무 담당 상무 김모(49)씨가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간부 등 조합원 10여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 집단 폭행을 당한 김씨는 안와 골절, 코뼈 함몰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한 시간가량 "네 주소 다 안다. 식구들 가만둘 줄 아느냐" "넌 죽이고 감방 가겠다"며 주먹과 발길질을 퍼부었다고 한다. 직원들에겐 "휴대폰으로 채증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얻어맞은 임원은 피투성이가 됐고, 일부 노조원은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을 닦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회사 직원들은 6차례나 112에 신고했다. 그런데 인근 파출소와 지구대, 강력계 형사까지 경찰관 20여 명이 회사에 도착해놓고도 민노총이 막아선다는 핑계로 40분 넘게 폭행 장소 주변을 맴돌기만 했다.

지금 한국에서 민노총은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석 달 사이에 7곳 정부 기관을 제집 안방 드나들 듯 점거했는가 하면 경찰 수십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청 공무원의 뺨을 후려갈기기도 했다. 자동차 부품 회사가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공장 출입구를 트럭으로 무단 봉쇄해 자기들 요구를 관철시켰다. 민노총을 이렇게 만든 것은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불법을 수수방관한 책임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권이 민노총을 비호하고 있다.

이 민노총 문제를 해결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중 하나라 할 것이다.

자유진영은 법적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 김정은 입국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

도 태 우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대표 / 변호사

1. 서언

자유진영은 법적 투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래 자유는 법치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자유는 법치에 의해 보호되는 반면, 법치를 지속 발전시키고 꽃피우는 원동력은 자유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대한민국 자유진영은 아직 법적 관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2년 전 탄핵 사태 또한 형해화된 법의 형식만이 아닌 ‘실질적 법치’의 관점을 중시하고 또 그런 견지에서 저항했다면, 체제탄핵적인 결과로 치달아가는 것을 훨씬 더 강력하게 저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탈원전, 방송장악, 정언검(政言檢) 유착에 의한 적폐청산 광풍, 법치행정 파괴와 독단적 강압적 경제정책의 횡행,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대북정책과 국방해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3권 분립의 파괴 등 거의 모든 현안에서 현정부 주도세력은 ‘실질적 법치’ 이념과 날카롭게 대립된다.

이 글은 현재 가장 응급한 현안이라 볼 수 있는 ‘김정은 입국 반대’와 관련하여 가장 유력한 근거를 국내에서 입법 제정되어 시행 중인 실정법의 내용에서 찾고 있다.

자유진영이 모든 투쟁에서 법적 관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서도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국내법으로서 국제형사범죄법의 제정

가. 보충성의 원칙: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보충적 관할권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을 가져온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로마규정’으로 약함)은 전문 4단에서 “국내적 차원에서

번문본자와같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과학 범죄의 처벌 드에 과학 범류아에 대한 제아설명을 드

○ 주서영 의원 하나라다의 주서영 의원입니다. 이 번아하고 분하 지역에서

○ **변문보자와 김석호** 어떠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파다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든지 간에 보편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 우리 국내 입국시 우리나라에 관할권이 있음

○ 주성영 의원 예, 소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趙舜衡 委員 위원장, 한 가지 잠깐만……

○委員長 安商守 예, 조순형 위원님.

○ 趙舜衡 委員 여기 보면 개인뿐만 아니고요, 국가 단체·기관에게 이 범죄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있는 것이지요?

○ 법무부장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趙舜衡 委員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이외에 북한이라든가 어느 국가에서 이러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그러한 물증이라든가 증거가 확보되고 그러면 이것을 기소하고 처벌하려면 어떤 절차로 들어갑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합니까, 우리가?

○ 법무부장관 김성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검찰국이 따로 있습니다.

(중략)

○ 趙舜衡 委員 아니, 여기 상세히 이 범죄를 나열한 것 보니까요, 지금 북한 인권 문제가 참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좀 연관이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에게 식량과 의약품에 관한 접근을 박탈하는 등 주민의 일부의 말살을 초래할 생활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 국제법규에 반하여 강제로 주민을 그 적법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국제법규에 반하여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등등 말이지요.

(중략)

북한에서 참 문제가 되고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인권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아서 이 법의 제정 의미는 상당히 심대하고 앞으로 남북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법무부장관 김성호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범죄를 지른 사람이 국내에 들어오면 우리가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지 않
은……

2) 2007. 11. 21. 법제사법위원회

○ 소위원장대리 문병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 문병호 위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2002년 11월 13일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관할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 등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도 처벌하는 등 형사법상의 특칙을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의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 공조 등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미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을 위한 이행입법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공청회를 생략하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범죄인 인도 문제에 대한 검토

1) 국제형사범죄법의 규정

국제형사범죄법은 제19조(「범죄인 인도법」의 준용) 제1항에서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범죄인 인도법」 중 “청구국”은 “국제형사재판소”로, “인도조약”은 “국제형사재판소규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범죄인 인도법의 규정

한편 범죄인 인도법 제5조(인도에 관한 원칙)는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소추(訴追),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형사범죄법 제19조와 위 조항을 연결시켜 보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인도청구가 있을 때만 국제형사재판소에 범죄인 인도가 가능해지고, 그 인도 여부도 의무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소결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창설을 가져온 로마규정은 회원국이 국내 형사 관할로 실효적 소추를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ICC는 그 국내관할을 보충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안하였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 위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은 북한 지역의 반인도 범죄를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며, 관련 범죄자가 우리나라로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이 기소 처벌권을 가지고, ICC로의 인도는 선택적인 사항일 뿐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국제형사범죄법의 해당 내용 (1) - 전쟁범죄

가. 2014년 <유엔 COI 보고서>의 내용

“1950년 이래 북한은 국가의 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타국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를 초래하였다”(위 보고서 제64항)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된 사람의 수는 아동을 포함하여 20만 명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위 보고서 제64항)

“대부분의 납치와 강제실종은 한국전쟁 및 1959년에 시작된 일본으로부터의 조직적인 한인 이주와 연관이 있다”(위 보고서 제66항)

“북한은 납치 및 체포를 위해 육해군 및 정보 요원들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작전들은 최고지도자 차원에서 승인되었다. 강제실종 피해의 대다수는 북한 당국을 위한 노동력 및 기타 기술 제공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일부 피해자들은 간첩 및 테러 활동에 투입되었다”(위 보고서 제67항)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된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출신 한인들은 그들의 출신 및 배경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 그들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어 외딴 지역의 농장이나 광산에서 강제노동에 투입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북한에서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1990년대 기근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위 보고서 제69항)

나. 6·25전쟁납북자와 국군포로의 경우

1) 6·25전쟁납북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주요 명부들이 존재하고 있다.

1			'50	2,438
2	6·25		'52	82,959
3	6·25		'52	(126,325)
4	6·25		'53	(84,532)
5	6·25		'54	17,940
6			'56	7,034
7	(1)		'63	11,700

※ 참고사항

- 1번 : 서울지역에 국한, 유명인사 위주로 작성
- 2번 : 휴전회담 협상용으로 전국 기초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작성
- 3번 : 국무회의에 숫자가 인용되어 있으나 실제 명부는 미발견
- 4번 : 2번 명단을 추가 보완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명부는 미발견
- 5번 : 의용군 제외, 세대주 중심으로 작성
- 6번 :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안부의뢰를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두 달간 가족 신고 받아 작성
- 7번 : 국방부(군정위 대한민국 군대표단) 작성, 제1권 11,700명 수록 명단만 발견

2) 대한민국은 2010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17년에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조사보고서」와 15권의 부록을 집대성한 바 있다. 정부가 12종의 전시납북자 명부를 취합한 결과 전시납북자의 총수는 95,456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3) 포승줄에 묶여 도보로 끌려올라간 경우 견지 못하는 납북자들은 도중에 처형되었으며, 남한공무원 약 2,000명은 북한 대동강변에서 집단 학살되어 3개의 대형 구덩이에 불법 매장되었음이 미국의 한국전쟁범죄조사보고문건 141번(Korean War Crime: KWC 141)으로 확인된 바 있다.

4) 2017년 10월 1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국군포로 해결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물망초 제45차 인권세미나에서 시나폴슨 UN인권사무소 서울소장은 “한반도에서 전쟁 포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며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을 근거로 전쟁포로가 인도적으로 대우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적대행위가 종료되면 집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의에 따라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발라즈 살론타이 고려대 교수 또한 발제문을 통해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상당수의 국군포로를 남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으며 이는 제네바협정과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 국제형사범죄법 상 전쟁범죄

국제형사범죄법 제10조(사람에 관한 전쟁범죄)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 상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인질로 잡는 행위
2.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고문이나 신체의 절단 등으로 신체 또는 건강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주거지로부터 추방하거나 이송하는 행위
4. 조건 없이 항복하거나 전투능력을 잃은 군대의 구성원이나 전투원에게 상해(傷害)를 입히는 행위

④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중대하게 모욕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처우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4. 적국의 국민을 강제로 자신의 국가에 대한 전쟁 수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라. 소결

1) 휴전 상태에서 미제로 남아있는 국군포로 및 6.25납북 범죄에 대해 그 책임이 승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국제형사범죄법 제10조 사람에 관한 전쟁범죄의 측면에서 심각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신성불가침의 최고규범을 이루고 있는 유례 없는 1인 독재체제에서 이 모든 사태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 그 체제범죄의 정점에 서 있는 김정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김정은은 6.25전쟁 종전선언의 주체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해 온바,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자 지위 승계를 공언하고 있는 형국이다.

2) 특히 김정은은 그 전쟁의 결과로 당시 피랍 및 억류되어 현재까지 돌아오지 못한 6.25전 시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승계된 책임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정치범수용소의 계속적 존재 및 납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범죄의 태양은 계속범으로서, 김정은은 지속적으로 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겠다. 6.25 전쟁납북자의 경우, 최고지도자 차원에서 승인되고 계획적으로 실행된 납북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북한 체제는, 그 행위만으로도 반인도적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납치범죄의 경우 납치되었던 피랍자들의 생사와 행방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범죄의 종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결국 납북자에 대한 범죄는 계속범의 유형으로 현재도 그 범죄는 계속 진행 중이며, 최고지도자의 승인과 계획 아래 실행이 착수되어 현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전쟁을 도발한 김일성의 지위를 이어받은父(김정일)에 이어 그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승계한 김정은의 승인과 고의적 의도 아래 그 범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겠다.

4. 국제형사범죄법의 해당 내용 (2) - 인도에 반한 죄

가.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인도에 반한 죄)의 내용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인도에 반한 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박탈하는 등 일부 주민의 말살을 불러올 생활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2. 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
3.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강제로 주민을 그 적법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4.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5. 자기의 구금 또는 통제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고문하는 행위
6.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성적 폭력 행위
7.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종교적 사유, 성별 또는 그 밖의 국제법규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집단 또는 집합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이하 "체포등"이라 한다)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나.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외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나. 김정은의 범죄 행위

1) 국군포로 및 6·25전쟁납북자에 대한 범죄행위

국군포로 및 6·25전쟁납북자에 대해 생사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김정은의 행위는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 제2항(인도에 반한 죄) 제8호에도 해당된다.

2) 정치범수용소를 둘러싼 범죄행위

[A]『2016 북한인권백서』(대한변호사협회) 제251쪽 내지 제263쪽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는 정치범수용소가 다수 유지되고 있으며, 그 시설 내에 감금된 피수용자의 수는 15만 명 내지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피수용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자행된 과도한 노동과 영양부족, 가혹한 고문과 즉결처분, 영아 살해, 여성들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은 위 백서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아래에 그 중 몇 대목만을 옮겨 본다.

“수용소 내 구류장의 경우 수감자가 일단 끌려가게 되면 남녀를 불문하고 삭발한 후에 1차로 모두 매를 때려 초죽음을 시킨다. 그리고 질질 끌고 가서 두 무릎 사이에 4각 각자(角字)를 끼우고 24시간 동안 꿏어앉히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불손하게 행동하면 사정없이 구타한다. 식량사정이 악화되기 전에는 하루에 100g의 콩밥과 시래기 소금국이 지급되었는데, 그것도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움직이면 처벌로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수감자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 일주일 후부터는 살이 썩어 들어가도 참는다고 한다. 그래서 수감자들 사이에는 구류장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혜숙 씨는 <18호 관리소>에 있는 동안 정상배급을 받을 경우 7 ~ 8인 가족이 4.5 ~ 5kg 정도의 말린 옥수수를 받았는데, 이것으로 한 달을 연명해야 되었다고 진술한다. 즉 하루 1인당 20.83 ~ 21.43g의 옥수수에 각종 나뭇잎과 풀을 섞어 먹었다는 것이다(한국 식당의 공기밥 한 그릇의 양은 쌀 100g), OO씨의 증언에 따르면, <14호 관리소> 수감자들의 한 끼 양식은 통갱냉이 20 ~ 30알과 배춧잎이 둥둥 뜬 소금국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 결과 수감자들이 갯도에서 100미터 이동하는 데 15분 이상이 걸리고, 삽질 한 번 하는 것도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고 OO씨는 진술하였다. 수감자 대부분이 펠라그라라는 단백질 결핍증에 걸려 있으며, 영양 결핍에서 오는 각종 전염병과, 심지어 정신병까지 앓게 된다고 OO씨는 주장한다.”

“수감자들은 이런 극도의 허기를 면하기 위해 돼지사료도 훔쳐 먹고, 심지어 생선저장탱크 씻은 물에 밥을 말아먹는 일도 있으며, 쥐와 벌레도 잡아먹고, 나무껍질도 벗겨 먹고, 풀도 뜯어 먹는다고 한다. 그나마 이런 일도 허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도원(간수)에게 들키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가혹한 징벌을 받는다.”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COI 보고서, 2014년)> 제60항 및 제61항도 지난 50년 간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와 그 안에서 자행된 “고의적 굶주림,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처벌에 의해 부과되는 생식권 박탈,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 등”을 보고하고 있다.

- [C]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된 위 행위들은
- i)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박탈하는 등 일부 주민의 말살을 불러올 생활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국제형사범죄법 제9조 제2항 제1호),
 - ii) 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같은 항 제2호),
 - iii)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같은 항 제4호),
 - iv) 자기의 구금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고문하는 행위(같은 항 제5호),
 - v)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성적 폭력 행위(같은 항 제6호)에 해당된다.

3) 종교 박해에 따른 인도에 반한 죄

<COI 보고서> 제26항에 따르면 “북한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국가가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조직화된 사회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및 언론·표현·정보·결사의 자유도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2016 북한인권백서』(대한변호사협회) 제141쪽에 따르면, “북한에는 5만 ~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 있다.”또한 북한은 “2003년 이후 14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기록됐다. 북한은 김정은이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탄압의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강제로 주민을 그 적법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국제형사범죄법 제9조 제2항 제3호)이자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종교적 사유, 성별 또는 그 밖의 국제법규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집단 또는 집합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같은 항 제7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기타 인도에 반한 죄

『2016 북한인권백서』(대한변호사협회) 제6쪽 내지 제9쪽 및 <COI 보고서> 제2쪽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는 출신·성분·등에 토대를 둔 차별, 이동과 거주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생명권

침해, 자의적 구금,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행위들 중 많은 부분은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 제2항 제9호 상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외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이상에서 보듯 김정은은 국제형사범죄법 상 처벌대상인 자이다.

5. 김정은의 유책성과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

가. 김정은의 유책성

1) 김정은은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 인도에 반하는 죄(반인도범죄)를 정점에서 자행해 왔고, 지금도 계속 자행하고 있다. 또한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으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한 김정은은 종전 선언의 주체임을 공언하고 있어 제10조 사람에 관한 전쟁범죄, 특히 현재도 진행 중인 납북자 감금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2) 김정은은 초청된 외국원수로서의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3조에 따를 때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정상적인 외국 국가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

1) 국제형사범죄법 제3조(적용범위) 제5항에 따르면,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하고 대한민국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설사 북한 지역을 외국으로 보고 김정은을 외국인으로 보더라도, 김정은이 대한민국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김정은은 대한민국 국내법인 국제형사범죄법의 인적관할에 속하는 대상이 됨을 피할 수 없으며, 김정은의 해당 죄목은 계속범으로서 김정은의 지위는 지속적인 현행범 상태이다. 심지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현행 범인은 영장 없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6. 결어

이상으로 김정은의 입국에 따른 법적 문제를 살펴 보았다. 자유진영이 현안에 접근할 때 법적 관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극복되어야 할 태도라 할 수 있다. 투쟁 도구로서의 법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를 지향하고 이를 확립해 가는 과정으로서 주요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히 법적 고찰을 병행하고, 실질적 법치를 세워가는 방향에서 지속적인 투쟁 전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선천성 자유결핍증’ 사회: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박 선 영

물망초 이사장 / 동국대학교 교수

1. ‘자유’와 ‘정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가치체계이다

자유, 천부적·생래적 자유를 일컫는 Freedom과 사회적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공화적 자유인 Liberty²⁾의 공통점은 둘 다 엄청난 피를 먹고 자란다는 점이다.

인류 역사를 보면 고대 그리스·로마 시절부터 발아(發芽)해 그 의미와 내용, 형태가 진화·발전해 온 ‘민주’나 ‘정의’를 위해 흘린 피보다 근대에 이르러 비로소 투쟁과 쟁취의 대상이 된 ‘자유’를 위해 흘린 피가 훨씬 더 많고 진하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약 2500년, 자유의 역사는 약 250년. 산술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의 1/10밖에 되지 않는 자유의 투쟁사에서 인간이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은 사실은 그 함의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를 1948년 건국헌법에서 너무 쉽게, 아주 간단하게 얻었다. ‘뺨이 아닌 자유를 달라’고 외치기에는 굶주림의 역사가 너무 길었던 탓일까, 자유를 위한 투쟁이나 실천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70여년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땅에서는 ‘자유’의 투쟁사가 ‘자유’를 빙자하거나 ‘자유’에 편승한 이념투쟁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탓에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자유’에 대한 논의 자체를 꺼려하거나, 자유에 대한 정확한 가치나 인식을 모두가 공유한다고 오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우리의 현대사는 진정한 자유(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세력과 사이비 자유(인민민주주의도 아닌 주체사상 추종세력) 세력이 뒤섞였던 탓에 정치적 후유증과 사회적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실정이다.

학습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민주’도 마찬가지이다.

전쟁의 후유증이 초래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자유’나 ‘민주’에 대한 치열한 논의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시대착오적이라며 좌악시하거나 터부시하는 사회적 풍조까지 조성되어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나 구별마저 감성적이다. ‘통일만 된다면 베트남 같은 나라가 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사회민주주의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라는 말이 거리낌 없이 ‘거대담론’이라며 횡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 freedom과 liberty의 개념도 짚어야 하지만 토론문의 성격상 다음 기회로 미룬다.

2. 선천성 ‘자유’결핍증 사회는 ‘학습’과 ‘시간’을 요구한다

18살(성인)만 되면 독립해서 나가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21세기에도 우리는 여전히 ‘피가 물보다 진’하다. 자유를 위해 흘리는 ‘피’가 아니라, 가족이기주의와 혈통주의를 강화하는 ‘피’, 그리고 ‘민족’과 같은 광풍과 ‘평화’ ‘통일’이라는 감성적 명분이 흡혈귀처럼 빨아들이는 ‘피’가 도처에 낭자하다. 흘러야 할 피와 흘리지 말아야 할 피가 뒤섞여 때로는 방향 감각을 잃기도 한다. 굳이 ‘피’가 아니어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바람’은 목적의식을 잃고 선거 때마다 광풍을 일으킨다. 선전 선동에 취약한 감성적 명분은 모든 논리적 토론과 합리적·이성적 사고를 초토화시키는 마취제가 되고 만다.

실용(實用)이나 실리(實利)보다 명분에 집착하는 유교적 사고방식은 모든 사회적 이슈의 결말을 엉뚱하게 이끌어 낸 다음에야 뒤늦은 탄식과 후회를 반복하지만 70년이 지나도록 그 탄식과 후회는 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발이 묶여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개선될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외교관계에서도 그렇다. 아니 개인은 계산적인 사고라도 하지만, 사회와 국가는 계산(국익)도 터부시할 정도로 맹목적 명분에 집착한다.

좀 더 우리 자신의 정신세계를 적나라하게 분석한다면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사회의 속성상 우리나라는 ‘자유’보다는 집단주의적 ‘평등’ 사상이 그 어느 나라보다 매우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복지국가원칙까지 동시대적으로 수입되면서 이 땅에서는 ‘자유’보다 ‘평등’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시대적 소명이 되어버렸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인간사회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평등’이라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흡인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상정한다. 그러나 평등은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 평등에 앞서 수 백 년에 걸쳐 자유를 쟁취해 온 서구사회와는 달리, ‘평등’의 전제조건이자 필요충분조건인 ‘자유’의 쟁취역사가 우리에게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했기에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선 지금도 우리는 심각한 [선천성 ‘자유’결핍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

자유(Freedom)를 갈구하던 근대국가는 생략한 채 민족국가(Nation State)도 아닌 王朝에서 피식민국을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21세기 복지국가, 그것도 세계화 속의 복지국가를 향해 과속으로 달려가다 보니, 그 길목은 70년이 지나도록 Freedom, Liberty, Welfare(Sozialstaat)가 뒤섞여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아비규환처럼 모두가 아우성이다. 우리의 정신세계엔 아직도 자유가 뿌리를 내리지 못 했기 때문에 육체적(Fleisches)·정신적(Geistes)·영혼적(Seelen)으로 ‘자유’라는 면역체계가 절대 부족하다. 천부적·생래적 자유(Freedom)는 피부적·개인적으로 터득했지만,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Liberty 부족은 극에 달해 개인·국민·사회·국가 모두가 아비규환이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자유와 민주는 ‘피’만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학습을 위한 엄청난 시간까지 요구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3.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는 개인주의와 Liberty

한국 사회의 오랜 지배가치였던 집단주의적 사고는 지금도 자유의 근간인 개인주의를 터부시하고 있다. 개인주의=이기주의로 치부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자유’의 주체인 개인에 대한 사유(思惟) 체계 자체가 단절돼 있다.

쌀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농경사회는 필연적으로 집단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농경사회와 그 가치규범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게다가 존재(Being)의 의의를 신과의 관계에서 찾는 서구 문명사회와 충효(忠孝)를 기본으로 하는 유교적 규범체계는 그 출발점과 지향하는 목적이 전혀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대단히 불편한 사실이지만, 이같은 [선천적 ‘자유’결핍증]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소위 ‘보수’도 예외는 아니다. ‘개인’을 무법(無法)과 유아독존(唯我獨尊)으로 폄하하는 사고가 가정과 사회, 국가에 만연해 있다. 독립적이며 책임의식을 가진 자유, 즉 근면·자립·자조·절제의 개인에게 요구되는 Liberty로서의 자유는 ‘나’ 아닌, ‘타인’에게만 요구한다. 물론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근면과 자립은 상당한 역량을 강화해 왔고 그 결과도 놀라웠으나, 그렇다고 해서 자조(自助)와 절제까지 요구하는 Liberty로서의 자유가 보수의 가치체계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니다. 태극기집회나 선거철에 보이는 보수의 양태는 정말 뼈아프게 되짚어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개인주의와 ‘자유’라는 토대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말이다. 기존의 보수진영에서 소위 피아구분도 못 해 보수끼리 진영싸움에 목숨을 걸고, 잘못도 인정하지 않으니 결과에 승복도 하지 않으며, 허위사실로 상대를 명예훼손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그 결과가 바로 ‘현재’라는 거울, 궤멸당한 것이 아니라 궤멸하고 있는 보수의 현실이고, 보수라는 단어를 자유진영이라고 바꾸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상처와 아픔을 직시하고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성장통을 자처했다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4.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수단, 자유가 본질

우리는 왜 오늘 ‘보수’라는 단어를 버리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새로 태어나고자 하는가?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오를 하기 위함이라고 추론해 본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목적이고, 그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길 즉, 수단이 ‘자유’라고 인식해 왔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도 괜찮고, 베트남식 통일이면 어떻냐, 하는 발언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그 어원으로 보면 자유주의+민주주의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수단이고, 그 목적이 자유다. 여러 사람(demos)이 통치한다(krakia)는 뜻을 가진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고안·발전해 오면서 2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변화해 왔다.³⁾

그래서 그 속성상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가치중립적이다.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입헌적 민주주의,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 앞에 각종 명사적 수식어가 술하게 많이 붙지만, 모든 민주주의의 공통분모는 ‘다수결’이다. 다수결로 주권(유권자)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핵심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수(數)가 부족하면 옳음(correctness)도 정의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래서 합의적(consensus) 의사결정을 강조하며 나온 것이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지만 민주주의의 학습기간이 일천하면 아무리 교육정도가 높아도 다수결이라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압도(override)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⁴⁾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가치지향적·가치구속적인 헌법적·제도적 장치가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Defensive democracy, abwehrbereite Demokratie), 투쟁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 전투적 민주주의(Militant Democracy)이다. 우리 헌법 전문의 저항권이나 제8조 제4항(정당강제해산제도) 등도 방어적 민주주의의 하나이고,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도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이다.

4.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Saint-Just)

아마도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다’라는 위기의식이 만들어 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한반도 안에서 ‘자유’라는 이름의 가치체계는 이렇게 취약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연감생심, 비전은 안개속이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과 비전을 제시한다면 230년 전에 St. Just가 말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각인하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지금까지 누란지세(累卵之勢)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헌법이 도입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투쟁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헌법적 자각을 해야 한다. 자유진영의 혁신과제도 그런 관점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심리학적 사고와 언행을 하자

민주주의사회에서 힘은 수(數)에서 나온다. 모두가 한 표다. 덩치를 키워야 하는 것은 선택이

3)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철학자들에 의해 고안된 민주주의는 수 천 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면서 현재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로 대별됐다. 혹자는 사회민주주의를 또 다른 제3의 정부형태로 분류하지만, 사회민주주의는 대의제와 시장경제질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의 교집합일 뿐, 대의제와 시장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인민민주주의와는 대척점에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와의 교집합 또는 인민민주주의의 단점은 제거하고 장점만 골라 담은 정부형태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같은 인식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게 한 의도적인 레버리지가 되었으나, 이에 관한 논의는 토론자로서 생략할 수밖에 없다.

4) 숙의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중요요소가 언론의 역할, 즉 주권자(국민)에게 모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well-informed)는 것이나, 이 자리에서는 논하지 아니한다.

아니라 필수다. 그것도 확실하게 키워야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이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 인민민주주의는 안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고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큰 판’을 짜자. 환골탈태(換骨奪胎). 지금까지의 소위 ‘태극기부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완전히 다른 외양을 걸쳐야 한다. 태극기부대라는 부정적이고도 비민주적인 어감을 가진 단어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그동안 태극기부대가 만 2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 같은 피땀으로 일구어놓은 좋은 자산도 유지·보존·계승할 수 있다.

탄핵 이후 이 나라를 바라보는 깨어있는 모든 사람은 아직도 억울하고 분하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 억울하고 더 분하다.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나 분노하는 자에게 친구는 없다. 어제까지 함께 하던 동지도 시간이 지나면 피로감과 현실적 문제에 짓눌려 어느 순간 사라진다. 눈물짓는 사람 옆에는 손수건과 꽃이 쌓이지만, 분노하는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워진다. 그러니 분노와 태극기는 가슴 속 깊이 묻어두고 이 정권에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그동안 보수라는 단어에 이유 없이 거리감을 두던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자. 다독여 주기도 하고, 같이 울어줄 수도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말도 혀 밑에 감추자. 인정은 남이 해 주는 것이지 자기자신이 하고자 하면 배척만 당한다. 그것이 바로 사회심리학적 전략과 전술이다. 힘을 키워야 나라도 바로 세울 수 있다. 나도 그들도 모두가 한 표라는 생각을 꿈에도 잊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는 결국 數 싸움이고 over power가 되려면 몸집을 키워야 한다. 덧셈(+)을 넘어 곱하기(X)가 되도록 대국민운동을 펼쳐 나가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뺄셈(-)의 언행과 형식으로 스스로를 위축해 오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지금은 ‘셈’으로 전략하게 된 것은 아닌지, 뼈저리게 반성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 적의 적도 동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유연성을 키우지 않는 한 over power는 언감생심이다.

(2) 다름과 차이, 시대적 변화를 인정하자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게 명분을 앞세워 선명성 경쟁을 하며 피아를 구분하지 못 하고 내부투쟁에 주력해 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복지국가에 필연적으로 ‘인권’, 특히 생존권을 전제로 급부행정을 한다. 인권은 보편적인 개념이고, 생존권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universal’ human rights declaration을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보편적’ 인권선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는커녕 이 땅의 여성과 청소년 등을 자유진영의 적으로 만들지는 않아왔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영국이 영국병을 고치며 개혁을 주도한 세력은 노동당이 아니라 보수당이었음을 잊지 말자. 노동당은 ‘노동자’라고 하는 국민의 일부계층을 그 토대로 하지만, 보수세력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주의(인권보장을 전제

로 한다)와 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 등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해 온 합리적·논리적·이성적인 집단이다. 서구사회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수구꼴통’이라는 험악한 단어로 불리는가? 단순히 우리가 네이밍에 졌기 때문일까? 아무리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고 해도 이슬람, 좌파, 동성애라는 인신모독적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서 어이없는 내부총질을 하고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보수 이전에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불법행위이다. 그 어떤 사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언행을 하면서 ‘보수’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보수와 자유진영을 욕보이는 행위이다.

(3) 투쟁적·전투적 민주주의는 고난의 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진영의 십자가다.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가치가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척박한 정치적 토양에서 흘러야 할 피가 많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나선다면 각자 십자가를 지고 피의 언덕에 오를 각오, 고난의 길을 건넌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스스로를 촛불‘혁명’정부라고 지칭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혁명정부가 합헌적이고도 합법적인 통치행위를 해 주리라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잘못된 ‘혁명’에 맞설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혁명정부가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은 숙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적폐청산’이라는 대중적 구미에 맞는 단어로 보복과 자유진영의 뿌리를 뽑기 위한 숙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선한 목자’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어기고, 국제적으로는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자가 남쪽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사진 몇 번 찍었다고 어찌하여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겠는가? 청와대 앞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김정은 사진이 스크린처럼 우리 앞에 나타났고, 도처에서 공산당이 좋다고 하는데 최소한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운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국민주권국가의 국민이 아니다. 지혜·용기·절제·정의가 바탕이 된 투쟁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가 없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음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인류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자유진영의 혁신과제는 한 마디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며,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체화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끝).

자유진영 정당의 이념과 철학⁵⁾ - 故 박세일 교수의 공동체자유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

손 용 우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 / 사무총장⁶⁾

1. 문재인 정부의 퇴행적(계급투쟁적, 종북적) 국정운영과 민심의 변화

□ 현재의 정치적 기세(氣勢)는 보수가 아닌 진보에 있다.

- 탄핵정국에서 드러난 보수우파의 총체적 위기에 따른 민심의 이반으로 진보좌파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이 우세한 상황이다.

□ 그러나 진보정치의 헤게모니는 예상보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의 국정실패와 시장실패의 원인은 제도 실행의 속도 문제가 아니라 좌편향적, 계급투쟁적, 종북적인 원리주의적 국정운영에 있다.
- 또한 대중 정서에 영합하거나 이를 더욱 조장하는 공격적인 포퓰리즘과 보수의 수준을 뛰어넘는 제왕적 통치라는 퇴행적 국정운영에도 있다.

□ 정보정치의 헤게모니는 정치이익 공유의 강력한 카르텔에 있다.

- 진보의 헤게모니는 DJ 및 노무현 정치세력 / 강건한 386 전대협운동권세력 /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등 정치우호세력 /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참여연대 등 민간주도세력들과의 강력한 결속에서 나온다.

□ 진보정치의 정체성은 ‘자기실현적 예언’이라는 신(神)에서 나온다.

- 세상을 선과 악, 가진자와 못가진자,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나누어서 대립, 투쟁, 혁명하는 것이 진보정치라는 믿음 / 보수는 상보적 관계가 아닌 적폐청산이라는 믿음 / 1948년 건국의 역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믿음 / ‘자유’ 없는 민주주의가 평등과 공정의 세상을 가져 온다는 믿음 / 법치주의도 대중의 정서에 영합해야 한다는 믿음 / 김정은은 정상지도자이고

5) ‘자유진영’으로 칭함은 최근 문재인정부와 진보좌파 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없애려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서 보수우파의 핵심가치인 ‘자유’를 수호하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독자의 기존 개념에 대한 편의를 고려해서 ‘보수우파’, ‘보수’, ‘우파’ 등의 표현도 아울러 사용하고자 한다.

6) 선진통일건국연합은 故 박세일 교수가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 설립(2006) 이후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1년 설립한 국민운동단체이다.

북한의 비핵화, 개혁개방, 정상국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 / 소득주도성장이 분배의 가치와 성장의 가치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 / 원자력은 악이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선이라는 믿음 등이다.

□ 2019년 정국은 경제축에 이어서 안보축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정은의 비핵화 기만이 현실화됨에 따라 대결적 북미관계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주 對 동맹에서 '자주'를 선택함에 따라서 외교안보동맹의 파국적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어부지리 민심만 얻을 것이다.

- 보수의 피나는 개혁과 변화가 없다면 2019년 진보에서 이탈한 민심은 보수의 어부지리 가운데 중도를 표방하는 당으로 가거나 혹은 더욱 선명한 진보당(정의당)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수권정당의 리더십을 상실한 자유한국당의 총체적 위기

□ 탄핵,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반성도 없었고 피나는 노력도 없었다.

- 자유한국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수구보수, 기득권에 안주하는 부패보수, 시대정신을 외면하는 반동보수, 정치이익의 계파싸움에 몰두하는 파벌보수에 머물고 있다.

- 자유한국당이 개혁과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자유진영의 사상과 철학을 재정립하지 않는다면
① 박근혜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친박 세력의 수구 보수적 노선, ② 비박세력 중심의 '공화주의'를 강화하는 보수 노선, ③ 이념과 철학은 불필요하다는 정체불명의 '실용주의' 노선으로 사분오열될 것이다.

□ 격변과 난세의 시대 필요한 유능하고 유덕한 큰 지도자가 부재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은 당분간 큰 인물 중심으로 '뭉치고 사는' 구조가 아니라 몇 몇 작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흩어져서 싸우고 죽는' 구조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 지도자가 없다면 더욱 더 보수정신(이념과 철학)으로 뭉치고 환골탈태해야한다.

- 최근에 보수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묻지마 식' 보수대통합과 반문연대의 움직임은 이념과 철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7)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공공선과 공익 우선의 시민정신을 강조하는 '공화주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확장 가치로서 이념과 철학적 가치로서 공화주의적 논의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진보좌파 진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가 공격받는 상황임을 유의해서 현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더 강화해야 할 때이다.

- 정치 공학적, 선거 전략적, 대중 영합적인 통합과 연대는 눈앞의 정치이익 앞에서 소인배들처럼 또 다른 분열을 자초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통합과 연대의 끈(가치와 이념)이 없기 때문이다.

3. 자유진영이 직면한 문명사적 변화와 역설적인 과제

- 세계문명사적으로 이념융합의 시대이며 국내적으로는 중도층이 확산되고 있다.
 - 세계적으로 20세기적 구태의연한 이념 대립의 시대는 약해지고 21세기적 이념통합, 이념융합, 이념상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 국내 중도층의 확산(30% 내외)에는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의 국민 분열적인 이념투쟁도 기여하고 있다.
- 국내 중도파는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변화무쌍하고 예측불가능하다.
 - 중도파는 중도진보, 중도보수, 혁신중도, 중도실용주의, 대도(大道)로서의 중도, 기회주의적인 중도 등이 혼재되어 있다.
 - 중도파는 선거에 있어서 유의미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지만 중도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정신(이념과 철학)의 부재로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뭉치기도 어렵고 중도정당으로 성장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적 사상전이 펼쳐지고 있다.
 - 남북의 [자유주의 對 反자유수령주의] 투쟁과 남남의 [우파 對 좌파]의 투쟁이 70년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더욱 더 커지고 있다.
 - 북한의 변화(비핵화, 개혁개방, 정상국가)가 이루어지고 국내적으로 성숙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세력이 등장할 때까지 한반도의 종적·횡적 투쟁은 역사적으로 당분간 필요한 과정인지도 모른다.
- 자유진영이 직면한 과제는 3가지이다.
 - ① 수구진보좌파 진영과의 건곤일척의 결전을 벌여야 하며, ② 문명사적 이념융합의 변화 속에서 중도파(합리적 진보 포함)를 포용해야하고, ③ 김정은 反자유왕조정권을 종식시켜 북한동포를 해방시켜야 하는 세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4. 자유진영 정당의 이념과 철학 그리고 전략

□ 정당은 정치이념과 국가비전을 공유하는 결사체이다.

- 이념과 철학을 분명히 할 때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가치정당, 비전정당, 정책정당이 될 수 있다.
- 자유진영 정당은 새로운 이념과 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세 가지 과제를 담아야 한다. 건국정신과 헌법이념을 계승하면서(제1과제), 오늘의 시대정신을 품고(제2과제), 내일의 비전과 가치를 담아야 한다(제3과제).

□ 제1과제: 건국정신과 헌법이념의 핵심인 ‘자유’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전제하지만, 모든 민주주의는 반드시 자유주의를 보장하지 않는다. 나치즘, 파시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反자유주의이거나 非자유주의와 언제든지 결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제2과제: 21세기 개혁적 자유진영으로서 시대정신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동시에 새로운 자유진영의 가치를 어떻게 시대정신으로 확장해나갈 것인가?

-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청년(20~40대)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사상으로부터 나온다. 미래 자유진영을 이끌 지도자로서 청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세계관, 국가관, 통일관을 심어줘야 한다.

□ 제3과제: [공동체자유주의] 철학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

- 故 박세일 교수의 철학인 공동체자유주의는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동양적 가치인 공동체주의와 조화로운 통합을 도모하려는 가치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완성과 국가발전의 원리이고 공동체주의는 개인행복과 국민통합 그리고 민족단결의 원리로서 제시되었다.
- 공동체자유주의는 2005년 한나라당의 이념으로 채택되었지만 이후 지속적인 우파정당의 이념으로 계승되지 못했고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으로도 채택되지도 못했다.

8) 현재 자유한국당의 강령과 당헌에는 ‘자유와 책임의 조화’,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을 강조하지만 ‘공동체 자유주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주성 교수는 “보수정권 10년 동안 박세일 교수의 공동체자유주의는 정당 내의 파당성과 지식인들의 진영논리로 빛을 보지 못했고 국정철학으로 구현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가 국정의 실질적인 이념이었고 박근혜 정부는 국가주도의 전략을 펼쳤다”고 지적한바 있다. 김주성, “21세기 국가철학: 공동체자유주의”『안민학 발전을 위한 제언』, 위공 박세일 선생 서거 1주년 추모세미나, 2018. 1. 17. pp. 8-33.

5. 공동체자유주의 계승 발전을 위한 2단계 접근 방안

5-1) 공동체자유주의의 한계

- 박교수는 자유주의가 ‘개혁적 보수’를 의미한다면 공동체주의는 ‘합리적 진보’를 의미한다”는 공동체자유주의의 좌우이념적인 의미를 부여한바 있다.
- 박교수는 지난 2012년 국민통합을 위하여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와의 상보적인 연합 전선이 필요하다는 목표로 [국민생각당]을 출범시켰지만 실패했다. 대의명분은 있었지만 여전히 좌우대결이라는 정치적 현실이 따라주지 않았던 결과였다.
 - 20세기적 우파가치에 머물러 있는 보수층에서 합리적 진보 세력을 포용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지 못한 이유도 있었고 동시에 진보세력 역시 합리성을 가질 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체자유주의는 자유화와 공동체정신이 성숙해져서 이념적 갈등이 줄어든 난세가 아닌 치세에 보다 적실한 이념과 철학인지도 모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자유주의를 대체할 만한 국가이념과 철학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동체자유주의를 현실의 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미래비전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래와 같이 2단계 접근방법을 제시해 본다.

5-2) 국민행복원리 . 국가개조철학 . 선진통일의 이념과 철학으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 2단계 접근방안

▶ 제1단계: ‘자유주의’ 가치의 극대화 전략

- 지금은 보수우파의 가치와 이념을 바로 세우면서 대동단결해야 하며 또한 수구진보좌파진영의 反자유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자유주의에서 ‘자유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그러나 20세기적 자유주의적 가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보다 성숙된 21세기적 자유주의 가치의 확장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 제2단계: ‘공동체주의’ 가치의 극대화 전략

- 제1단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공동체자유주의에서 ‘공동체주의’라는 가족공동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역사공동체, 자연공동체라는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강조해야 한다.
- 또한 합리적 진보를 포함한 대도중도, 혁신중도 등을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담대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 이와 동시에 공동체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민본적 민주주의’, ‘인본적 자본주의’, ‘법례사회’, ‘홍익인간 교육’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6. 결 론

보수우파의 시민단체들이 의기투합되어 ‘자유진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 대동단결이 과제이다. 그 끈은 자유진영의 올바른 이념과 철학이 되어야 한다. 우리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난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투적’ 자유주의자가 되어야 하며, 치세의 자유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자유주의자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국민대통합과 자유선진통일의 역사적 대업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자유’를 부정하는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에 다름 아니다!

유 광 호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직대) / 사회학

1. 문재인의 ‘혁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재인은 “혁명”을 했다고 국내외에서 공언하고 있다. 그 말은 사실이다. 문 정권은 ‘민족해방’이라는 대한민국과 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뒤집어엎는 ‘전복(顛覆)혁명’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자서전에서 1975년 월남이 월맹에게 적화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자랑스럽게 회고했다. 그는 2차 대전 후 제3세계에서의 공산혁명전략인 ‘민족해방혁명’을 동경하고 높이 평가한다. 그것은 미국을 ‘제국주의’로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과 친밀한 동맹관계 속에서 북한의 적화 침략을 저지하고 발전해 온 대한민국을 자주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연결된다. 때문에 북한에 대한 철저한 억지력인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무너뜨리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골몰했다. 지금 김정은을 불러들여 이른바 종전선언을 하고 ‘우리 민족끼리’ 구호 아래 반미전선의 공식화를 세계에 드러내 보이겠다는 일념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질리게 만들어 한미동맹이 해체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북한의 이른바 ‘남조선혁명’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의 ‘민족자주정부’를 이루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진작부터 동조하고 주장했던 ‘연방제’ 통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사상과 노선, 전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문재인과 그 동지들이 대학교를 다니던 1970-80년대에 지하와 대학의 혁명운동권에 내용적으로 지도적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1980년대의 ‘전대협’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을 공개적으로 외치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선도투쟁을 대담하게 벌였다. 이들 출신들이 지금 정권과 각계 핵심 권력자들이다. 김일성은 일찌기 노동운동만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자들은 제도적 권력이 있는 분야들로 진출하게 하라는 지령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 한국의 좌익들은 그람시의 진지전 전술과 구미의 탈식민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 각종 현대 좌익사상들을 들여와서 동조세력을 두텁게 만들어왔다. 1960년대 통일혁명당 사건 이후 면면히 성장해 온 이 ‘민족해방’ 혁명세력과 종족적 민족주의 그리고 좌익 민족주의 사조가 오늘날 합법을 가장한 ‘전복혁명’의 역량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2. 한국 정치에 작동하는 3가지 차원의 변수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한국의 정치의 변수는 3가지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다. 국제적 차원, 지상(합법)의 차원, 지하(비합법)의 차원이다. 이중에 국민들 눈에 잘 인식되지 않으면서 중요한 차원이 지하에서 작동하는 혁명정치다. 예를 들면 민노총의 대기업 공격을 보자. 이것은 임금소득 상위 십분위에 속하는 고임금을 받는 민노총 소속 대기업 정규직 종업원이 벌일 수 있는 경제적 투쟁이 아니다. 기업을 그들이 의미하는 ‘민주주의적’으로 참여하고 관리하는, 즉 노영 기업 내지 기업의 사회주의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들은 노영 방송으로 이미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국회를 포위하겠다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직접 할 수는 없는 비합법투쟁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복전술’의 일환이다.

이들은 이런 투쟁을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실제로 국민 중의 소수가 참여할 뿐인 집회 민주주의였다. 문재인이 ‘촛불혁명’을 민주주의라고 자랑하듯이, 시위대를 조직해서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의 의지의 표현도 아니고 국민주권의 발로도 전혀 아니다. 이들은 현대에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민주주의가 왜 ‘자유민주주의’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모호함을 이용하여 사상의 전복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87년 민주화 항쟁”이라는 개념 규정에서 우리는 전도된 ‘민주’ 개념을 볼 수 있다. 당시는 ‘전대협’을 비롯한 지상 및 지하 차원의 전복세력들이 이미 강력하게 성장해서 힘을 휘두르고 있는 단계였다.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으로 무장한 사회주의혁명세력이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민주주의’라고 본다. 그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 쟁취를 내세웠다. 전술적이었다. 그것은 레닌과 스탈린의 단계적 혁명론과 부합한다. 그들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이라는 것은 좌익혁명세력이 근저에서 작용하고 이후 혁명 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회주의로 가는 전술적 단계였다. 한국에서 1970년대 이후 소위 ‘민주화’운동은 선동 정치인들과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민주화’로 간주하는 좌익혁명세력이 연합해서 벌인 투쟁이 그 진면목이었다. 그것은 성공했고 그 ‘민주화’투쟁의 전사들이 지금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혁명’의 주역들이다. 그 ‘민주화’의 진면목을 꿰뚫어 본 국민들이 많지 않았다.

3. 왜 ‘자유민주주의’여야 하는가?

현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치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엄밀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모두에 의한 지배’다.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19세기 프랑스 사상가 Destutt de Tracy는 ‘민주주의’는 문명의 원시적 단계라고 했다. 문명은 민주주의와 왕정 -> 귀족제 -> 자유민주주의(대표제 민주주의)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중에 민주주의와 왕정(일인에 의한 지배)은 둘 다 전제(專制)통치로 귀결했다고 보았다.

한편 ‘자유민주주의’는 19세기 말 미국 혁명을 통해 성립된 인류 문명의 최대 발명품이다. 국민민주주의, 대표제, 법의 지배, 권력분립, 개인의 자유 보장 등을 핵심 요소로 한다. 이로써 현대가 시작되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 배척하는 ‘민주주의’는 현대에서는 공산전체주의나 나치전체주의 같은 전체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민간사회(civil society)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배제하는 체제다. 현실적으로 국가의 정치형태는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로 대별되고 양자는 빙탄불상용의 관계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나는 전체주의자다”라고 고백하는 격이다.

민주주의는 만능용어요,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 동시에 모호하기 이를 데 없다. 따라서 그것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인민 민주주의’도 좋은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려면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의 한 형태지만 그 성격은 정확하게 전체주의다. 그리고 정치적 용어로서 ‘인민’의 상대 개념은 ‘국민’이다. ‘인민’은 전복 혁명을 위한 개념이고, ‘국민’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평등한 권한을 가진, 공동체적 동료라는 개념이다. 인민은 투쟁과 전복을 위한 것이고, 국민은 화합과 단결, 조화를 위한 개념인 것이다. 이런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국민’이라는 개념과 사상, 그 결사체로서 국민국가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집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복전술이 성공하는 데는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있는 것일까? 이 점을 살피기 위해서는 근대 민주주의의 장단점을 최초로 현대적으로 분석한 프랑스 사상가 토크빌을 끌어와 볼 만하다. 토크빌에 따르면, 민주적 국민들은 자유를 위한 자연적인 취향을 가진다. 이 자연스런 취향은 평등을 향한 당당하고 정당한 정념을 고취한다. 그래서 지위가 낮은 자를 더 높은 지위로 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 자유민주공화국에서 모두의 자유로 귀결된다. 그러나 토크빌이 생각하기에, 인간의 마음은 불행하게도 그런 당당하고 정당한 평등 정념뿐만 아니라 평등을 향한 타락하고 부패한 취향도 또한 품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레벨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강한 사람을 자신의 레벨로 끌어내리려고 애쓴다는 것이다. 민주사회의 구성원들은 조건들의 평등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상당한 또는 모두의 자유를 희생시키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토크빌은 걱정했다. 민주적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한 자연적인 취향도 그런 행위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자유는 그들이 바라는 주요하고 변함없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들의 큰 갈망 즉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평등이다. 그들은 평등에 대하여 열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영원하고 스러지지 않는 정념을 느끼는 것이다. 민주적 인간은 확실히 처음에는 ‘자유 속에서의 평등’을 얻는 것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실패하면 ‘자유 속에서의 불평등’보다 ‘예속 속에서의 평등’을 더 좋아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모두의 평등이 자유헌법 안에서가 아니라 자유의 억압에 의해 보장되는 전제(despotism)로 귀결되기 쉽다고 토크빌은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민주적 전제(democratic despotism)’라는 것이다. 토크빌에 따르면, ‘민주적 전제’는 꼭 강제력에 호소할 필요는 없을 것이었다. 반대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가능한 한 똑같아질 때까지 민주주의 안에서 그 큰 평등을 향한 자연적 경향을 키우는 것이 해야 할 전부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인간들은 그들이 전적으로 평등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울 것이다. 그런 ‘민주적 전제’는 그것이 평등을 향한 사람들의 정념과 일치하기 때문에 “온화”할 여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절대적”일 수도 있으며, 자유를 전제 권력에게 넘겼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할 수 있다. 이런 타락의 경향이 내재해 있는데다가 현 정권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 갖은 복지 뇌물을 국민들에게 먹이고 있으니 이 사회의 정신적 부패와 타락상은 구제불능의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다. 나라를 전복하려는 입장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지 못할 행위들이다.

사회적 조건들의 평등을 향한 행진이 역설적으로 자유로 귀결하던지 아니면 전제로 귀결할 수 있기 때문에 평등에서 야기된 문제들에 대한 처방책도 평등에 기반할 필요가 있다고 토크빌은 보았다. 민간사회의 여러 조직과 활동, 그리고 사법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 기관간의 평등인 것이다. 사법부는 타락한 ‘민주적 전제’ 그리고 그것을 초래할 속성을 품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항체이다. 전문성의 독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에서는 대법원장과 좌경 법관들의 발호로 전복혁명에 앞장을 서고 있다. 북한 정권은 ‘초(超)전체주의(super-totalitarianism)’체제이자 반민족권력이다. 이 전체주의와 합작하려는 세력들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위기극복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지식인은 행동하고, 시민단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희 범
자유민주국민연합 집행위원장

머리, 몸통, 팔다리를 외형으로 오장육부의 기관과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두뇌가 있을 때 인간이라 말하며, 이들이 모여 결사를 이룬 각종 시민단체 역시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작동될 때 단체의 인격이 완성된다.

인간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통제기관인 두뇌가 정상작동을 하지 않으면 식물인간이라 한다. 현실을 냉정히 평가하면 자유진영 인사들과 단체들은 식물인간 수준이라 혹평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좌파 인사들과 각 단체들은 자신들 목적달성을 위해 긴 시간 고난의 길을 걸어오며 투쟁을 위한 수단으로 팔다리 몸통과 두뇌까지 완전히 갖춘 후 광우병 난동을 일으켜 이명박 정부와 1차 예비정치전쟁에서 일정 수준의 타협으로 정치적 실리를 얻었고,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 박근혜 정권을 삼키는데 성공했다.

이들이 성공시킨 촛불혁명군의 대열은 민주노총, 전교조를 비롯한 핵심 봉기군 100만, 이를 직간접지휘 . 통제하는 정치조직 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선전·선동역을 하고 있는 KBS, MBC, 한겨레, 경향 등 전국언론을 장악한 언론노조 그리고 은밀하면서도 철저한 위장술로 마치 정상적 순수 시민단체인양 행세를 하고 있는 반 대한민국 핵심 ‘참여연대’를 축으로 한 좌파단체들이다. 마지막 방점은 불법, 반합법 등 모든 투쟁 후 법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00여명의 변호사 조직 등 촛불혁명군은 두려울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건국가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고 있는 수많은 좌파단체들은 투쟁속에 성장하며 전쟁의 기술을 완벽히 갖춘 현대판 검투사들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자유진영이 이런 프로 검투사집단과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막연하다. 그러나 이들 좌파 세력을 제어할 능력을 자유진영의 지식인과 시민단체가 갖추기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불의에 행동으로 저항해야 개인과 조직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속에 성장을 기약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NGO 육성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저는 오늘 주제 중 위기극복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제언 드린다.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비정부기구), NPO(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은 대체로 지역 · 국가 · 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로, '비정부성'이 강조된 정부기구 이외의 기구를 말한다.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며, 인권 · 환경 · 보건 · 성차별 등의 특정 부문을 중점적으로 추구하기도 한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준공공(semi-public) 민간조직을 가리킨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자유진영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NGO역할을 제대로 시작한 단체도 있었다. 청와대, 여당, 전경련 기타 지원그룹을 배경으로 풀뿌리가 없이 성장한 한계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이라는 정치공격에 무참히 무너져 버렸다. 자유진영의 양대 정권은 좌파들처럼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각 시민단체 역시 좌파들 수준의 시민단체 육성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내 자유의 가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집단의 규모와 세력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다. 그 결과 좌파단체와 MBC가 앞장서 가짜뉴스를 넘어 유언비어를 확대재생산 시키며 MB정권출범 초부터 자유정권을 공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대적해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려는 세밀한 계획이 없었고 또 이들의 가공할 위세에 주눅이 들어 타협을 최선이라 생각하며 '실용주의'라는 똥판지 정책노선을 들고 나와 5년 임기를 겨우 채우고 나왔다.

결정적인 것인 박근혜 정부 역시 파괴력을 갖춘 좌파집단과 대적하기 위해 자유체제를 수호할 시민군 창설과 각종 시민단체 시스템 구축, 새로운 언론환경 육성 그리고 이들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당정의 창구를 만드는 것이 정권과 대한민국을 안정화를 위한 초석이라 인식을 했어야 함에도 박근혜 정부 역시 이들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국민통합'이라며 정세인식을 오판하는 방향으로 내달렸다. 결국 좌파가 득세하여 자유진영을 "적폐"라며 자유를 빼앗고 노예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촛불혁명의 과정이며 그들이 완성해야할 사명인 것이다.

오늘 자유진영의 다수 단체들이 한곳에 모여 자유진영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시국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도 변화를 위한 노력이기도 필자는 좌파들의 촛불혁명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가야할 좌표설정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재인 정부탄생의 일등공신, 세칭 서울대보다 더 잘나가는 대학 '참여연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참여연대-시민단체를 넘어 '좌파정치권력 양성소'

참여연대는 94년 박원석, 김기식, 박원순 등과 386세대가 주축으로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기업 공격수 역할수행을 하며 출발, 98년 김대중 정권 출범 후 시민단체 중심세력으로 부상하여 2006년 전후 참여연대 임직원 출신 530여명이 정권창출의 공으로 정부기관 진출, 정치권력 장악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04년 노무현 정부 출범시 850여개 기업에 후원금 요청 공문을 보내 건축비 40억원을 모으는 권력남용을 자행하는 등 재벌기업 약점을 공격하여 자발적 후원금 명목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탁하여 자본권력까지 구축한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시민단체이다. 이런 검은 짓이 가능한 것은 20여개가 되는 각 기관이 정부, 국회, 기업을 항시 감시 고발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참여연대 재정

회원수 14,500명, 월 회비 1만원 기준 145,000,000원, 후원금 53,000,000원, 사업수익 30,000,000원 합계 228,000,000원(이중 활동가 급여 135,000,000원)이다. 회원 분포는 3~50대가 무려 82%이며 공개된 예산구조와 비공개 예산을 포함하면 풀뿌리 조직체 참여연대는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견고한 조직체다.

2018년 참여연대 10대 중점과제

1. ‘바꾸자 정치검찰, 쫓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 캠페인
2.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개선 활동
3. 개헌 캠페인
4.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유세 강화와 재산세제 개편 캠페인
5.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 촉구 활동
6. 과거 정부와 삼성 등의 불법행위 처벌 촉구와 사건 결과 공개 활동
7. 인권기반 아동·노인 돌봄정책 제안과 공공성 강화 캠페인
8. ‘좋은 정책’ 제안 등 지방선거 대응
9. ‘국정원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 국정원 개혁운동
10.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2018년 참여연대가 내세운 10대 중점 사업은 거의 완성되었다. 참여연대는 이상과 같은 막강한 권력으로 국가보안법폐지, 파병반대,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한미FTA반대 등 반대한민국, 반자본주의운동에 앞장서 오면서 좌파의 핵심 단체로 우뚝서있다.

참여연대 출신 정치관료들

한명숙(총리), 이재정(통일부장관), 윤덕홍(교육부총리), 김명곤(문화부장관), 김기식(의원), 박원순(시장), 조국(민정수석)....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의 주요자리를 차지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시 인권위장직을 내리 3대가 참여연대에서 독식했으며, 대통령 직속 조직에 131명이 입각했다.(문재인 정부 이전)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된 후 서울시의 핵심 자리도 참여연대에서 장악했으며 문재인 정부들어 청와대 주요보직도 서울시 박원순의 측근과 참여연대가 장악했다. 특정 집단에 의해 장악된 권력은 상호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패거리식 고착된 그들만의 사고로 일방주행을 한 결과 문재인 정권은 빠르게 방향을 상실하고 있다. 거대 공룡 참여연대와 절대권력 문재인 청와대의 잘못된 결합이 국방, 경제, 사회통합문제 등 국가가 통째로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전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 다음 장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에 의해 기용된 참여연대 출신들

※☆:참여연대시 직책

청와대 (9명)



장하성
정책실장
☆경제민주화
위원장



조국
민정수석
☆사법감시
센터 소장



김수현
사회수석
☆정책위
부위원장



황덕순
고용노동
비서관
☆국제인권
센터 실행위원



김성진
사회혁신
비서관
☆경제금융
센터 소장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사회복지위
실행위원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부산
참여연대
조직부장



홍일표
정책실장실
선임행정관
☆연구팀장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화사업국
간사

정부 (7명)



대한민국정부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경제개혁
센터 소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공동대표



이효성
방송통신
위원장
☆자문위원



박은정
국민권익
위원장
☆공동대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책위
부위원장

정책보좌관 (2명)

- 김진욱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간사
- 김창수 통일부 정책보좌관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기식
전 금융감독
원장
☆사무처장

산하 단체장 (3명)



김용익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
☆자문위원



김영준
한국콘텐츠
진흥원장
☆운영위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참여사회
연구소
연구위원

선출직 (3명)



박원순
서울시장
☆상임집행
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운영위
부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정책위원

위원회 ※☆:참여연대시 직책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참여사회
연구소 연구위원

▶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 정해구)

- 부위원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 ☆집행위원
- 임지봉 서강대 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 김호기 연세대 교수 ☆정책위원장
- 서복경 서강대 연구교수 ☆집행위원
- 최은순 변호사 ☆정보공개사업단 단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정책기획위 산하 정부재정개혁특위



위원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조세개혁
센터 소장

▶ 국정자문기획위(대통령직 인수위 해당)

- 김호기 연세대 교수 ☆정책위원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조원희 국민대 교수 ☆포럼 참여사회 위원
- 김연명 중앙대 교수 ☆사회복지위 부위원장
- 윤태범 방송대 교수 ☆행정감시센터 소장
-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외교부 산하 TF

-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운영위원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가정보원 직폐청산TF

- 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참여사회연 위원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사법감시
센터 소장

- 김두식 경북대 교수 ☆사법감시센터 위원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조사위

- 김정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국가인권위 혁신위



위원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
☆☆공동대표

-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인권사업국장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인권센터 간사
- 최은순 변호사 ☆정보공개사업단 단장

▶ 금융위 금융행정혁신위

- 정세은 충남대 교수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공정거래위 산하 TF

- 김남근 변호사 ☆집행위원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국민권익위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



단장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
☆☆자문위원

▶ 대검찰청 검찰개혁위



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
소장
☆☆자문위원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TF

- 위원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구재이 세무사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 경찰청 경찰개혁위

- 1대 위원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고문



2대 위원장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감사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서보학 경희대 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산하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 전신) 사무처장

▶ 관세청 관세행정혁신TF

- 조수진 변호사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출처:중앙일보>

결 론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가 2016년 5월 10일 참여연대를 2008~2015년 8년동안 140억 원대의 금품을 부정 모금한 책임을 물어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회비 24억원 정도는 새발인 것이다. 수백억원이 회전되고 있는 참여연대의 부정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필자가 참여연대를 해부한 것은 순수민간단체인 참여연대가 재단법인 다섯 개(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커피,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모체이기 때문이며, 이들 단체들은 언어의 상징조작술로 ‘아름다운...’라는 간판으로 시민을 속이고는 온갖 악한 짓을 다해 오고 있다.

2000년 설립된 아름다운재단은 최초출연재산 3억 1천여만원을 참여연대로부터 지원 받고, 아름다운재단은 93억 5천여만원을 임의 전용하여 아름다운가게를 만들고, 아름다운가게는 국내외 요지 180여 곳에 운영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22억원을 임의 전용하여 아름다운커피를 만들고, 아름다운재단은 4억 2천여만원을 임의 전용하여 희망제작소를, 9억 2천여만원을 전용하여 공감을 만드는 등 자유진영의 시민단체가 도저히 모방할 수 없을 정도의 역량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선책은 좌파들이 답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들이 걸어간 길을 가되 우리는 지름길을 가야한다. 시간이 없기에 주야로 분투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아무리 위대한 이론도 현실화를 위해서는 이론가들이 신념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 행동을 두려워해서는 각자가 기안한 이론을 현실화 시켜 낼 수 없다. 우리 모두 행동합시다! 행동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탈북자들에 있어서 ‘자유’는 목숨보다 귀중하다!

허 광 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저는 지식인으로서가 아니라 애국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인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여적행위로 말미암아 생사기로(生死岐路)의 운명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문재인 여적정권의 반역행위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70년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는 북한식 독재를 방불케 하는 무소불위와 안하무인으로 말미암아 시장경제질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에 있어서 자유는 목숨보다 귀중한 가치이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향하는 바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목숨보다도 더 귀중하다고 합니다. 더더욱 동토의 땅 북한을 탈출해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우리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목숨 이상으로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성공적인 삶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3만4천여 명의 탈북자들은 김씨왕조 세습독재로부터 인권과 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무참히 유린당했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찾아온 이곳 자유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인간 생명의 필수적 요소인 공기처럼 한순간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곤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의 가치를 송두리째 뽑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귀중한 자유가 지금은 불법 대선을 통해 정권을 강탈한 문재인 정권에 의해 무참히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력을 강탈한 문재인과 청와대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주사파 세력들은 헌법 개정을 밀어붙여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를 말살하려 광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리 되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들어 저 동토의 땅 북한을 바라보아도 우리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무장 북한의 3대세습살인정권의 종말은 역사적 필연이다!

‘고난의행군’ 3년 동안 350만의 동족을 무참히 굶겨 학살한 북한의 살인정권은 인류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가장 포악한 정권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70여년 3대세습 살인독재도 모자라 8천만 한민족 동족과 전 인류에 핵 참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모든 자원을 핵무장에 퍼부은 북한은 오늘날에 이르러 1990년대 고난의 행군보다 더 참혹한 결말을 불러올 수 있는 엄중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부자 3대를 못가는 것처럼 동족살육으로 온갖 악행을 저질러온 북한의 살인정권 역시 궁극적으로 스스로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역사적 필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즉각 중지하라!

그러나 오늘날 문재인 여적정권은 백기를 들고 국제사회에 투항해오는 김정은에게 먼저 백기를 들고 마치 김정은을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것처럼 환호하며 살인자의 서울답방에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국 대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

비핵화의 실천의지와 일말의 노력도 없는 김정은의 기만적인 서울답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조직돼 활동하고 있는 김정은의 체포결사대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와 대한민국 검찰에 고소 고발되어 있는 김정은이 우리의 신성한 자유대한민국의 영토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정은이 자기 자신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문재인의 일관성 없는 서로 다른 주장에 회의를 느끼고 있을 것임은 자명할 텐데 김정은이 무엇을 믿고 서울을 답방한단 말입니까. 이는 문재인 종북여적정권이 출범한지 2년 만에 본격적인 레임덕에 직면하여 문재인이 김정은을 등에 업고 반역여적정권의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꼼수에 지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는 이와 같은 여적반역의 현실로 미루어볼 때 문재인 정권 역시 김정은 정권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반드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핵폐기와 북한인권문제가 의제가 되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위기에 직면한 남과 북의 두 반역 정권이 서로의 필요성에 따라 김정은 답방이 성사될 경우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아울러 김정은 정권이 핵보다 더 무서워하는 북한인권문제가 반드시 정상회담의 중점 의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눈만 뜨면 인권투쟁과 민주화운동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인권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김정은 정권과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며 문재인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자유대한민국의 주적임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이 같은 요구마저 무시하고 상전과 주구간의 밀약으로 굴욕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이것으로 문재인 정권의 운명은 끝이 될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위선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탈북자들은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처자들을 무참히 학살한 김정은 정권에게는 아부굴종하면서 24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자행하는 위선적이고 비굴하고 추악한 통치행태로 말미암아 문재인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포악한 김정은 독재정권 종식과 그 살인정권에서 무참히 인권을 유린당하며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해방과 북한사회의 민주화 실현이지 결코 김정은 살인정권의 생명연장이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이 2400만 겨레와 반인륜적 인권유린을 외면한 채 김정은 정권 편에 서서 아부굴종할 것이 아니라 압제에서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의 편에 서서 북한민주화와 북한 주민들이 인

권해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문재인이 우리 3만2천여 탈북자들과 자유진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김정은 살인정권과 결탁해 대한민국의 존엄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북한민주화와 2400만 북한주민들이 인권해방을 끝끝내 외면한다면 김정은과 함께 남북한 8천만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유진영은 대동단결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자유진영의 애국국민들이 하나로 대동단결해서 사생결단으로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더 이상 여적반역을 조종하는 국회내 종북여적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과감히 아스팔트로 뛰쳐나와 애국진영과 함께 문재인 정권 퇴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배신자들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태극기 애국국민이 하나로 결집돼 자유진영과 힘찬 대오를 형성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괴멸은 시간문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유진영이 하나가 돼 위기에 빠진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구원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